

2010년도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

# 2010년도 정세 평가와 2011년도 전망

2010. 12

국제정세 · 남북한정세 · 경제정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Part 1 2010년도 국제정세 회고 및 2011년도 전망

---

• 요약 .....	7
1. 2010년도 정세 평가 .....	21
2. 2011년도 정세 전망 .....	31
3. 주요 안보현안 및 이슈별 전망 .....	48
4. 2011년도 정책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	57

## Part 2 2010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평가와 2011년도 전망

---

• 요약 .....	73
I. 2010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평가 .....	84
II. 2011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	98

## Part 3 2011년도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 요약 .....	113
I. 2011년도 세계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 .....	122
II. 2011년도 국내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139



# 2010년도 국제정세 평가 및 2011년도 전망

2010. 12

## — 요약

1. 2010년도 정세 평가
2. 2011년도 정세 전망
3. 주요 안보현안 및 이슈별 전망
4. 2011년 정책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 작성자

송은희 이인호 서동주 김성배 조성렬  
이수형 박병광





## 1. 2010년도 국제정세 회고

- 아프간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의 경제악화 지속 등으로 미국의 국가 재건이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현안 문제로 대두
- 미·중 양국은 지역적·국제적 현안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과 협력, 균형과 통합 양상을 주기적으로 표출
- 2010년 11월 11일~12일 서울 개최 G-20 정상회의는 환율문제 등 세계경제의 까다롭고 중요한 현안해결을 위하여 G20 국가가 국제 공조 정신을 발휘, G-20 정상회의가 명실상부한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로 정착되는 기반 마련
-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유럽의 정치 통합이 가시화 되었으나 2010년 유럽 발 재정위기로 정치통합력 약화 조짐 부각
- 2010년 11월 19~20 리스본 NATO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쇄신을 위한 새로운 전략개념 채택
- 2004년 ‘남미국가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남미국가연합 창설 조약이 공식적으로 발효
- 대화와 협력이 부각되었던 2009년과는 달리 2010년 미·중 관계는 동북아 역내 주도권 다툼을 놓고 양국의 균형정책이 표면화

- 2010년 9월 조어도(센카쿠列島, 다오위島) 부근에서 발생한 중국 선장 구속 문제로 중·일 간 영토분쟁 고조 등 동북아 역내 주요 국가들 간 영토분쟁 재현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안정성 고조
- 미·중 갈등, 북한의 후계구도, 남한에 대한 북한의 무모한 군사 도발 등으로 6자회담의 정체와 북핵 문제 공전
- 후계구도와 맞물린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로 2010년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경색
-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우리정부의 외교전 전개로 인해 유엔 안보리의장 성명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의장 성명 도출
- 북한에 의해 자행된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 무력공격 및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연평도 포격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

## 2. 2011년도 국제정세 전망

- 미 국력의 지속적 쇠퇴와 중국의 급부상 지속으로 국제정치에서 미·중(G-2) 체제가 보다 확연해 질 것으로 전망
- 국제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은 시장 지배 환율제도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환율갈등 조짐
-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함께 그리스, 아일랜드에 이어 구제금융을 받게되는 차기 주자로 일찌감치 지목받아왔는데, 스페인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유로존 재정 위기 재발

- 일·중 간 센카쿠 영유권 갈등으로 인해 점화된 동북아지역 영유권 분쟁이 일·러 간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 가능성
- 동북아지역의 영유권 분쟁은 국가간 분쟁요인으로 늘 잠재돼 있던 이슈로, 최근 러시아의 국가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시도는 자칫 영토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을 북핵문제 해결의 장이 아닌 북한이 자신 입장만 선전하는 장으로 전략시킬 것을 우려
-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 및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공개 등 핵 보유 강화의지의 표명으로 인해 미국이 북핵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 보다 전략적 관리 의지를 강화할 가능성
- 2012년 강성대국 원년 달성이라는 목표와 김정일에서 김정은 체제 이행과정에서 김정은 리더십의 확립과정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 및 대남 위협전략 지속 전망
- 특히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공개로 핵 보유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북한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핵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가운데 남북관계 공백상태 불가피
- 우리정부는 북한의 권력이행기의 불안정 국면 등 내부 급변사태 등에 대비해 2010년 8.15 경축사에서 언급된 대통령의 ‘통일세’와 같은 맥락에서 주변국에 대한 통일외교 역량을 강화
- 서독이 동독에 대해 동방정책을 추진했지만, 한편으로 서방세계에

대해 서방정책을 병행했던 사례를 교훈삼아 한반도 통일에 주요 변수가 될 주요국에 대한 통일외교의 구체적 행보 진행

- 2012년은 우리의 총선·대선이 있는 중요한 해인데, 북한은 1년전 부터 우리의 총선과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할 것인 바,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남 심리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
-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우리사회 중복세력과 연계 통민봉관정책의 일환으로 친북성향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재야 세력 등을 준동하여 우리사회 분열과 혼란을 초래

### 3. 주변 4강의 對한반도정책 전망

- 2011년도 한·미 간에는 대북정책을 포함한 국제 공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FTA의 의회 비준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군사현안에 대한 협상에서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
- 한·미간 군사 현안으로는 전작권 전환대비 군사협조기구 강화, 전략적 유연성의 구체화, 주한미군기지 이전, 미국의 MD사업에 한국의 참여문제, 방위비 분담 등이 존재
-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정책공조가 강화되고 있어서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미·북관계의 진전은 당분간 경색상황이 지속될 전망
- 2011년 미·북관계는 미북 양측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감행·긴장을 고조시킨 뒤 제3차 핵실험 감행 예상

- 미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으므로 6자회담 재개는 낙관할 수 없으나 마냥 이대로 갈수없는 상황인 바, 적절한 기회를 포착,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 파견 등, 경색상황 타개할 것으로 전망
-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견제를 위해 한·일 협력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
- G-2시대 개막에 즈음하여 한·일 양국은 역내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데 이해를 같이하면서 한·미 및 미·일 안보협력을 연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전망
- 중국의 시장팽창을 견제하고 양국의 시장통합을 통해 자본유치와 시장 확대를 꾀하려는 한·일 양국 정부의 이해가 맞물려 2003년에 중단된 한·일 FTA의 정부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 농후
- 간 나오토 내각도 자민당정권과 마찬가지로 납치문제 우선해결을 내세우며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하는 등 대북 강경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북·일 관계의 경색국면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일본과의 디아오위다오(釣魚島) 분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에도 영토·영해를 둘러싼 문제에서 ‘힘의 외교’를 더욱 더 적극화하고 국제지위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추구해나갈 것으로 예상
-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 맺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교류를 강화하는 등 협력기조를 지속할 전망

- 그러나 중국은 내심 한·미 군사동맹관계의 발전 추세와 한·미·일 협력방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주목할 것이며 중국의 이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엇보일 경우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음
- 2011년도 북·중관계는 금년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 붕괴방지와 김정은 세습후계 체제 안정적 공고화를 위해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재현될 전망
- 중국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강화추세에 있는 한미동맹에 대응하는 한편 김정일 정권의 붕괴방지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 나갈 전망
- 반면 북한은 중국 의도를 간파한 상태에서 중국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對서방세계를 향한 메신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달성하는데 이용하고자 시도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는 기존의 對남북한 등거리, 균형접근 입장을 견지해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 완화 촉구 등 대한반도 영향력 제고 및 한반도 안보현안에 대한 적극적 개입 전망
- 한·러수교 20주년의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국 정상회담의 회동, 고위급 인사 교류, 사회문화 교류 확대, 경협 증진, 러시아 현대화 부문에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보다 심화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

- 러시아는 2010년도와 같이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안보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가운데 북핵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 강조, 식량 지원, 친선 교류 활동 지속 등 대북 지원·협력을 통한 영향력제고 상황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반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에 있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군사적 안정을 저해한다는 인식속에 UN을 통한 대북비판과 제재에 나서는 한편,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촉구
- 또한, 양국 정상간 친서 교환, 예술공연단 방문, 임업부문의 협력 강화 등은 지속되어 나갈 것으로 보이나, 나진지역을 둘러싼 중·러 간 경쟁이 심화되고, TSR, TKR 연결사업,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등 남·북·러 3각경협은 일정정도 한계를 노정할 것이 예상

#### 4. 주요 안보현안 및 이슈별 전망

##### 가. 북핵문제

- 북한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이어 ‘연평도 포격사건’을 저지르는 등 남한에 대한 도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핵 도발’ 징후 역시 포착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내년에 3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결국 북한이 자신의 협박외교가 통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오지 않는 한, 2011년 내에 북핵문제의 의미 있는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나. 남북관계의 불투명성

-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노선과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향후 특별한 전기가 없는 한 2011년 남북관계는 대단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선택지를 극도로 좁혀 놓았으며 기존 대북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

## 다. 한반도 정전/평화체제

-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은 확고한 대북 억지가 뒷받침되지않는 한반도 평화담론이 얼마나 취약한지 여실히 증명
- 6자회담 자체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장 2011년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정세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다만, 북한이 중국과의 공조하에 서해상 군사적 긴장고조를 이유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 동시논의 공세에 대비

## 라. 북한정세의 급변 가능성 문제

-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가능성은 주변국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사안으로 주변국들은 북한 급변사태를 동북아질서의 안정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정부는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다양한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궁극적

으로 북한 급변이 통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준비할 필요

#### 마. 동북아 동맹구조/다자안보

- 2010년 동북아에서는 다자간 안보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동맹구조가 강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는 바, 2011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동북아 다자안보 논의가 재활성화 될 경우, 이미 6자회담에서 합의 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한 동북아 평화·안보 메카니즘 문제가 주된 의제가 될 전망

#### 바. 한미동맹 발전

- 2011년은 이명박 정부에서 발전되어 온 「21세기 전략동맹」 구상이 한층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
- 동맹구상의 구체화 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 적용 방식,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현실화 등을 둘러싼 미·중/한·중간, 그리고 국내적 논란 가능성은 상존

#### 사. 한일 역사·영토 갈등

- 일본 민주당정부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따른 과거사 청산을 시도한다고 하면서도 교과서문제나 독도 문제를 둘러싼 도발을 재개할 경우 한·일간 영토 및 역사 갈등의 재발 불가피
- 다만, 일본 민주당정부는 총리 및 각료 차원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과거사 망언을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보여 옛 자민당정권 때와는 달리 강등이 다소 완화되는 양상이 예상

#### 아. 동북아 영토분쟁

- 최근 동아시아에서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민족주의의 강화 △해결되지 않은 역사문제 △집단세력으로 등장한 인터넷여론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
- 최근의 영토분쟁은 역내 각국 간 외교마찰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우리정부로서는 북핵공조를 위해 힘써야하는 관련국 외교라인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

### 5. 2011년 정책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 가. G-20 정상회의 계기, 글로벌 리더십·위상 제고

-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G-20 정상회의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G20의 모토에 걸맞는 성과를 거양한 바, 향후 국제기구, 다자외교 무대에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킬 필요
-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은 비분쟁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파병으로, 우리군의 해외 진출에 시험대가 될 수 있는 만큼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등 파병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현지와 국내에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

-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바, 북핵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치밀하게 준비

#### 나. 21세기 전략동맹의 공고화·가속화

-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을 2011년에는 더욱 공고화 하고 가속화할 필요가 있는데, 한·미간 채택한 ‘확장억제, 새로운 작전계획, ‘전략동맹 2015’ 등의 합의 이행 한편, 2011년초 한미 FTA를 반드시 비준
- 미국이 중국의 지위를 G-2로 보는 상황에서, 우리도 한·중관계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
-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율성이 보다 커질 것으로 판단

#### 다.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 추진

-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군사적 수단으로 강력히 응징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스마트한(Smart) 방식으로 대응하되, 북한이 추가 도발할 엄두를 낼 수 없도록 한미연합 자위권 발동 등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면서도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는 방안 검토
- 천안함 사태이후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고 있어 북한이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박차하면서 무모하게 추가도발을 자행, 긴장 고조시킨

후 3차 핵실험을 자행할 가능성에 대비

#### 라. 북한체제의 급변 가능성 대비 및 통일외교 전개

- 북한체제 급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간 철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
- 따라서 한·미·중 또는 한·미·일 등 주변 강국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대비태세와 공조태세를 갖추기 위한 다자간 1.5트랙 대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또 한반도 통일에 적합한 동북아 안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

#### 마. 동북아질서 재편 대응 및 역내 다자협상체제 구축

- 동북아질서 재편에서 우리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면서도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일, 한·중·일 등 다자 협조틀도 강화할 필요
-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얽혀있는 역내 영토관련 갈등 구조는 양자간의 문제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
- 역내 다자안보 협상체제의 구축을 통해 주변 강대국 행태를 상호 결박하는 외교가 필요

## 바. 역내 주변국 관계 증진 및 현안 해결 노력

- 북한 군사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대북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해 북핵문제 및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3국간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대북 공조를 지속
- 하지만 미·중간 조율로 북핵 6자회담의 조기 재개로 결론 날 경우, 우리 정부는 대일외교의 강화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태세가 이완되지 않도록 조치
- 현재와 같은 한·일 우호협력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역사 및 영토문제는 정부와 민간 Two Track 방식으로 대응
- 일본이 의도하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회 쟁점화를 차단하고 우호적 국제사회 여론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일본의 정략적 도발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 요청 등 강경 대응
- 한편으로 현재와 같이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전략의 파트너로 규정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추진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격상에 따른 양국관계의 발전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잠재적 갈등사안들이 부상함으로써 양국관계 훼손 및 심각한 안보현안으로 등장할 경우에 적극 대비
-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한·중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한·중의 대북 영향력 경쟁을 악용, 김정일 후계체제가 기존 선군

노선 유지를 할 수 있게 함은 한중 모두에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

- 한·중은 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전략적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외부지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내부적 변화를 촉진시켜 나가는 공동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WMD 확산등 글로벌 안보사안과 북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선 비판적 입장 견지 및 UN에서의 논의 통한 제재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출
- 우리로서는 남북한 대치 국면의 동북아 안보 질서 속에서 추후 북한도발에의 대응, 남북한 긴장완화, 새로운 출구 전략의 모색에 있어 러시아가 지닌 중개자적 위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긴요
- 우리가 모색할 한·러경협 사안들은 블라디보스톡과 이르쿠츠크에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추진, 가즈프롬, 로스네프트 등 국영기업과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통합가스 공급 라인망(UGSS) 건설에의 참여, 극동시베리아 인프라 구축 사업에의 진출 등이 대표적임
- 특히, 후자의 경우 철도 이외에 항만, 도로, 공항 등에의 투자, 통신인프라 및 통신서비스사업진출, 물류복합단지 건설에의 참여, 석유화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진출 등으로 실질적 경협이 이뤄지는 사안들로 이에 대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긴요.<끝>

## 1. 2010년도 정세 평가

### 가. 국제정세 평가

#### (1) 국제전반

##### [ 미 국력의 지속적 쇠퇴와 국제적 외교입지 타격 ]

- 아프간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의 경제악화 지속 등으로 미국의 국가 재건이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현안 문제로 대두
  - 경제위기의 지속으로 아프간 전쟁의 성격이 대테러전에서 대반란 작전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국가 재건이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현안 문제로 부상
  - 또한 국력의 지속적 약화에 따른 미국의 국제적 위상 약화로 브릭스(BRICs) 국가들을 중심으로 달러화 대체 방안 논의 조짐
- 특히, 최근에 불거진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미 외교전문공개 파문으로 미국의 국제적 외교입지 타격

##### [ 미·중 대립과 협력, 균형과 통합의 주기적 교차 ]

- 2010년 초 발표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및 달라이라마 접견,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서 갈등이 심화
- 미·중 양국은 지역적·국제적 현안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과 협력,

균형과 통합 양상을 주기적으로 표출

- 위안화 평가 절상, 핵안보, 북핵문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G-20 서울 정상회담, 기후변화문제 등 지역적·국제적 현안문제를 둘러싸고 주기적으로 대립과 협력의 모순적 관계 표출
- 이는 기본적으로 양국이 서로에 대하여 ‘관여와 통합’, ‘내외적 균형’을 주된 요소로 삼고 있는 헤징(hedging)전략 추구에서 연유

#### [ 지역적·국제적 다자안보협력 확산 ]

- 핵안보, 비확산, 테러 등 지역적·국제적 현안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지역적·국제적 다자안보협력 확산
  - 2010년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세계 44개국 및 유엔, 유럽 연합,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가 참여, 비확산을 주제로 한 최초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 2010년 5월 2~27일 제7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개최 및 2010년 11월 25일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제9차 상하이협력기구(SCO) 총리회담개최
  - 2010년 12월 1일 세계 최대 정부간 안보협력기구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담이 지난 1999년 이후 11년 만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막
- 따라서 역내 안보와 정치·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

## [ G-20 정상회의 ]

-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2010년 11월 11일~12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은 세계 경제 불균형의 문제를 논의, 각국이 자기 나라 통화정책을 재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마련
  - 또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비즈니스 서밋을 포함시켜 다자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접근의 중요성 강조
-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환율 문제 등 세계 경제의 까다롭고 중요한 현안 해결을 위하여 G20 국가가 국제 공조 정신을 발휘, 그 결과 주요 과제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
- 이러한 성과는 G20 정상회의가 명실상부한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협의체(Premier Forum)로 정착되는 기반 마련의 평가
- 아울러 G20 비회원국의 주요 관심사인 개발 의제를 논의에 포함시켜 개도국 지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

## [ 유럽연합의 정치통합력 약화 조짐 ]

- 2009년 12월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유럽의 정치 통합이 가시화 되었으나 2010년 유럽 발 재정위기로 정치통합력 약화 조짐 부각
- 그리스·아일랜드의 경제위기로 인한 구제대상, 포르투갈과 스페인 재정 위기 등 유럽발 경제위기로 유럽연합 국가들 간에 경제위기 해법을 놓고 의견 대립
  - 그에 따라 유럽연합은 1)독일-북유럽, 2)재정 위기국, 3)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3개 그룹으로의 분열 조짐 부상

[ NATO의 새로운 전략개념 채택 ]

- 2010년 11월 19~20 리스본 NATO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쇄신을 위한 새로운 전략개념 채택
  - 리스본 정상회담을 통해 NATO는 집단 방위의 핵심 요소로서 미사일 방위의 중요성 강조 및 아프간과의 장기적 파트너십에 합의
  -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NATO는 향후 10년간 동맹의 로드맵으로서 '적극적 관여와 현대적 방위'로 압축되는 새로운 전략개념 채택

[ 남미국가연합 창설 조약 공식 발효 ]

- 2004년 '남미국가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남미국가연합 창설 조약이 공식적으로 발효
  - 2008년 5월 23일 브라질리아에서 남미정상회의를 통해 '남미 지역문제는 남미 스스로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남미국가연합 창설 조약 합의
  - 아르헨티나·볼리비아·칠레·에콰도르·가이아나·페루·베네수엘라·수리남, 그리고 11월 30일 우루과이 의회비준으로 남미국가연합 창설 조약이 공식 발효
  - ※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의 의회 비준이 끝나지 않았지만, 조약규정상 최소 9개국의 의회 비준으로 공식 효력 발휘

## (2) 동북아

### [ 미·중 균형정책의 표면화 ]

- 동북아 역내 주도권 다툼으로 미·중 양국의 균형정책 표면화
  - 대화와 협력이 부각되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2010년 미·중 관계는 동북아 역내 주도권 다툼을 놓고 양국의 균형정책이 표면화
  - 헤징전략의 구성요소중의 하나인 균형(balancing) 정책은 북한 핵문제, 중일 영토분쟁, 북한의 천안함 폭침(3.26) 및 연평도 무력 도발(11.23)을 둘러싸고 미·중 균형정책 가시화
  - 이에 따라 동북아 안보 상황은 북·중 동맹과 한·미 동맹 및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하는 동맹 전선 형성 및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 [ 역내 영토분쟁 재현 조짐 ]

- 역내 주요 국가들 간의 영토분쟁의 재현으로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안정성 고조
- 2010년 9월 조어도(센카쿠列島, 다오위島) 부근에서 발생한 중국 선장 구속 문제로 중·일 간의 영토분쟁이 고조
  - 특히 중국이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일시 중단하는 등 영토분쟁이 경제마찰로까지 비화되는 양상을 보인 바 있어 일본측이 긴장
- 또한 일본과 러시아는 남 쿠릴열도(일본은 북방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 조짐을 보임
  -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11.1) 뒤를 이어 슈발로프 제1부 총리도

일본 측과 분쟁 중인 쿠릴열도를 방문(12.14)하는 등 영토문제를 둘러싸고 러·일 간에도 갈등이 고조

#### [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일본정부의 보수 선회 ]

- 일본 민주당정권은 당초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에 따른 아시아주의 복귀 방침을 철회하고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한 보수노선으로 복귀
  - 특히 한국의 천안함 사태 이후 일본 민주당 정권은 오키나와 내 후텐마 미군기지 문제를 원안대로 받아들이는 등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미·일 갈등 해소에 주력
- 중·일간 조어도 충돌 및 천안함 사태 이후 일본정부는 ‘방위대강’ 개정을 통해 일본의 방위전략 기조를 옛소련에서 중국과 북한으로 변경하고 자위대의 역할도 기동군 위주로 재편성

#### [ 6자회담의 정체와 북핵 문제 공전 ]

- 미·중 갈등, 북한의 후계구도, 남한에 대한 북한의 무모한 군사 도발 등으로 6자회담의 정체와 북핵 문제 공전
- 특히 북한이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기간에 공개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더 복잡화되는 분위기 조성

### (3) 한반도

#### [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과 남북관계의 단절 ]

- 후계구도와 맞물린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로 2010년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경색
  - 김정은으로의 북한 후계작업과정에서 나타난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의도적 무력도발(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로 남북 관계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경색·냉각됨
  -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후계과정에서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리더십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 마련에 집착

#### [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이후 우리정부의 천안함 외교전 전개 ]

-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우리정부의 외교전 전개로 인해 유엔 안보리의장 성명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의장 성명 도출
- 북한은 ‘천안함 사건’ 관련, 남북 외교전에서 북한이 승리하였다고 자평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선전하였지만, 한국·미국은 연합 해상훈련 작전명 ‘불굴의 의지’를 개시하여 한미동맹의 견재함을 과시
- 안보리 의장성명 이후 북한은 대내적으로 한미 연합해상훈련과 관련, 초강경수를 던지면서 전쟁운운 등 한반도 긴장분위기 조성으로 북한 체제 결속 도모 등 김정일-김정은 후계구도 구축에 활용

### [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공개로 북핵문제 공전 ]

- 북한이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기간인 2010년 11월 9일~13일 방북했던 해커 박사를 통해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의 실체를 공개
- 북한정권이 현 시점에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한 것에는 몇 가지 저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무엇보다 북핵협상에 우라늄농축 의제까지 추가해서 협상을 복잡하고 어렵게 하려는 의도
-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리더십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이라는 핵무기가 김정일을 상징했다면, HEU 프로그램은 김정은을 상징

### [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계기, 대응양상 변화계기 마련 ]

-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그동안의 북한의 대남위협 양상과는 달리 대남도발의 수위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수준
- 금번 북한에 의해 자행된 우리의 영토에 대한 직접적 무력공격 및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포격은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
- 우리정부는 북한의 무차별적인 도발행위에 대해 '자원권'의 개념 확대 차원에서 강하게 응징할 것과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한에 대한 압박구도를 형성

## 나. 2010년도 정책 성과

### [한미 전략동맹 강화]

-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6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비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뒤, 올해에는 이를 다방면에서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성과를 거양
- 특히 한미 양국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상황 하에서 대규모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공조태세를 보임으로써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과시
- 또한 한미 양국은 FTA 재협상을 통해 양국의 ‘이익 균형’을 추구하고 양국 의회에서 조기비준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경제적 상호의존과 더불어 동맹 강화의 성과를 창출

### [ G20정상회의 개최를 통한 국제적 위상 강화 ]

- 한국은 11월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중진국을 연결하는 가교국가(bridge state)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위기 극복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
- G-20 정상회의 개최는 한국이 처음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간, 선진국들 사이에서의 ‘진실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서울 G-20 정상회의에는 역대 가장 많은 각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가했을 뿐 아니라 교통·경호·안전·설비 등 모든 면에서 최상급의 정상회의로 국내외에서 인정받았음

#### [ 한일병탄 100주년을 맞이한 일본의 문화재 반환 ]

- 일본정부는 한일병탄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에 의한 약탈도서 및 문화재의 일부 반환을 약속하는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한 화해 조치를 취했으나 일왕의 방한초청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 견지
  - 한·일 지식인 1,118명(일본측 531명)은 ‘1910년의 한국 강제합병 조약이 원천무효’라며 일본총리의 사과 담화 발표를 촉구했으나 일본정부는 합병의 강제성은 인정했으나 합법성 입장은 고수

#### [ 한일 군사협력의 개시 ]

- 천안함 사태의 대응을 위한 7월에 열린 한미 해상연합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 4명이 참관하고, 10월에 개최된 PSI훈련에 일본 함정이 참가하는 등 유례없는 한·일간 군사협력이 시작
  - 이번 한·일간 군사협력이 일시적으로 끝날지, 제도적으로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출발점이 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
  - ※ 간 나오토 일본총리는 한반도유사시에 한국거주 일본인 구조를 목적으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발언하여 파문 야기(12.10)

## 2. 2011년도 정세 전망

### 가. 국제질서 전반 특징

#### [ 국제체제 재편 가속화 및 미·중(G-2) 체제의 부상 ]

- 미 국력의 지속적 쇠퇴와 중국의 급부상 지속으로 국제정치에서 미·중(G-2) 체제가 보다 확연해 질 것으로 전망됨
  - 2011년 국제질서는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중국의 확연한 G-2 체제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
  - 그에 따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주기적 갈등과 대립, 타협과 협력의 관계가 전개될 가능성 높음
- 국제금융위기의 지속과 국제적 환율갈등 재연 가능성
  - 국제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는 시장지배 환율제도 가이드라인을 둘러싸고 환율갈등 조짐

#### [ 유로존 위기로 인해 유럽통합 약화 ]

- 스페인은 포르투갈과 함께 그리스, 아일랜드에 이어 구제금융을 받게되는 차기 주자로 일찌감치 지목받아왔는데, 스페인에 대한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유로존 재정 위기 재발
- 따라서 2010년 12월 16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 간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

※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는 유럽 지도자들이 유럽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규모확대와 유로존 단일채권을 의미하는 '유로본드' 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

- 무디스는 2011년 상당한 차환 압박에 직면할 스페인 은행권에 재자본화 비용이 많아진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 비율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바, 스페인발 유로존 위기로 인해 16개 유로화 사용국의 '유로존' 위기 지속으로 유럽통합 가속화 주춤

## 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 [ 일·중 및 일·러 간 영토분쟁 후유증 지속으로 역내불안 ]

- 일·중 간 센카쿠 영유권 갈등으로 인해 점화된 동북아지역 영유권 분쟁이 일·러 간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 가능성
- 동북아지역의 영유권 분쟁은 국가간 분쟁요인으로 늘 잠재돼 있던 이슈로, 최근 러시아의 국가회복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시도는 자칫 영토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 [ 미·중 간 환율 갈등 지속 등 미·중 갈등 예상 ]

- 미·중간 환율 갈등에서 한국의 원화는 미 달러화의 유동성 증가로 향후 빠른 원화절상과 환율 변동성 확대라는 두가지 리스크 예상
- 미·중간 환율 갈등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될 가능성

[ 미국, 북핵문제 조기해결보다는 전략적 관리의지 강화에 중점 ]

-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을 북핵문제 해결의 장이 아닌 북한이 자신 입장만 선전하는 장으로 전략시킬 것을 우려
- 북한의 3대 세습 공식화 및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공개 등 핵 보유 강화의지의 표명으로 인해 미국이 북핵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 보다 전략적 관리 의지를 강화할 가능성

[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남북관계 경색국면 지속 ]

- 2012년 강성대국 원년 달성이라는 목표와 김정일에서 김정은 체제 이행과정에서 김정은 리더십의 확립과정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 및 대남 위협전략 지속 전망
- 특히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공개로 핵 보유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북한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핵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가운데 남북관계 공백상태 불가피

[ 우리정부의 통일외교 강화 ]

- 우리정부는 북한의 권력이행기의 불안정 국면 등 내부 급변사태 등에 대비해 2010년 8.15 경축사에서 언급된 대통령의 '통일세'와 같은 맥락에서 주변국에 대한 통일외교 역량을 강화
- 서독이 동독에 대해 동방정책을 추진했지만, 한편으로 서방세계에 대해 서방정책을 병행했던 사례를 교훈삼아 한반도 통일에 주요 변수가 될 주요국에 대한 통일외교의 구체적 행보 진행

## [ 북한의 통민봉관 정책 지속 등 대남 선전·선동 극성 ]

- 2012년은 우리의 총선·대선이 있는 중요한 해인데, 북한은 1년전 부터 우리의 총선과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할 것인 바,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남 심리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
-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우리사회 중북세력과 연계 통민봉관정책의 일환으로 친북성향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재야 세력 등을 준동하여 우리사회 분열과 혼란을 초래

## 다. 주변 4강의 對한반도 정책방향

### (1) 미국

#### ▶ 2010년도 대외정책 평가 및 2011년도 전망

#### [ 평가 ]

-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2010년에는 아프간 상황악화, 이란의 핵개발 추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이 상대적으로 경제적·군사적으로 부상하자 다각도로 견제
- 동북아에서 일·중간 센카쿠열도 분쟁(9월)과 일·러간 쿠릴열도분쟁(11월)의 와중에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 천안함 사태(3.26)와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도발(11.23) 관련 한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

- 안보적으로는 “핵무기 없는 세상 구현”이라는 기치아래, 러시아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서명(4.8)하고,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4.12)와 유엔에서 NPT평가회의(5.3-28)를 주도 하면서 핵비확산을 위해 노력

## [ 전망 ]

-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는 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군사경쟁에서 무역 마찰과 환율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나, 대테러, 경제위기, 북핵 문제, 비확산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협력이 필요한 바, 양국은 경쟁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협력할 전망
- 오바마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의 독자적인 국가창설을 강력히 지지해 왔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친이스라엘 정서가 강한 공화당이 승리한 만큼, 중동 평화 문제에 관한 한, 오바마의 입지는 크게 약해질 전망
- 2012년은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주요들의 정권교체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각국은 대외문제보다 국내 문제에 관심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도 2011년에는 외치보다는 내치, 특히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

## ▶ 2010년도 대내정책 평가 및 2011년도 전망

### [ 평가 ]

- 2010년 11월 2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원(임기 2년) 435석 전원, 상원의원(임기6년) 전체 100명 가운데 3분의 1과 보궐

선거를 포함한 총 37석, 그리고 주지사 37명을 새로 선출

- 선거 결과 연방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기존 178석에 61석을 더해 과반인 218석을 넘겨 239석을 확보했고, 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새롭게 7석을 추가하여 47석을 차지하면서 압승

- ‘오바마 심판’으로 명명된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지지부진한 경제회복과 실업난(실업률 9.8%) 해소 실패, 위기대처능력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유권자들의 실망감 및 티파티(Tea Party) 보수주의 운동 때문으로 평가

## [ 전망 ]

- 2011년도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중산층 감세 정책, 의료보험 개혁, 이민 개혁 법안, 에너지 법안 추진 등이 거센 공격을 받을 전망
  - 공화당은 소득 수준 최상위 2%에 대한 감세 혜택을 없애면 오히려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의료보험 개혁안에도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
- 2011년도 오바마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 직후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정쟁을 최소화하면서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재선의 기반을 구축할 전망
- 2011년도 경제는 고용시장 조기회복 불투명과 주택시장 개선 지연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재정적자도 크게 점차 확대될 전망

## ▶ 2010년도 미국과 남북관계 평가와 2011년도 전망

### [ 한미관계 평가 ]

- 2010년도 한미관계는 복원의 수준을 넘어 매우 강화되었으며, 그 계기는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과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 및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공격
  - 미국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포격도발 직후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였고, 안보리의장성명 도출과정에서도 한국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 7월과 12월의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세계에 과시
  - 토론토 한미정상회담(6.26)에서 양국정상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간 최초 개최된 2+2회의(7.21)에서 한미동맹의 전략동맹화를 통한 협력 및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공동성명 발표
- 2010년 한미관계는 과거 북한에 대한 인식차이로 인해 불편했던 관계를 완전 해소하고,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서 동맹국으로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어느 때보다 공고함을 과시하면서 미결로 남아있던 FTA협상도 완전타결

### [ 한미관계 전망 ]

- 2011년도 한·미 간에는 대북정책을 포함한 국제 공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FTA의 의회 비준과정에서 약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군사현안에 대한 협상에서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

- 한·미간 군사 현안으로는 전작권 전환대비 군사협조기구 강화, 전략적 유연성의 구체화, 주한미군기지 이전, 미국의 MD사업에 한국의 참여문제, 방위비 분담 등이 존재

### [ 미북관계 평가 ]

- 2010년도 미북관계는 지난해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이후 특별한 접촉이 없는 가운데, 천안함 사건(3.26),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11.12), 연평도 포격 사건(11.23) 등으로 인한 한미공조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의 강화로 악화
  - 4월 발표한 미국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북한이 NPT 탈퇴국가이면서 핵보유국임을 차치하고 있어 미국의 핵공격 배제대상에서 불포함 천명
  -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로 두 차례의 한·미연합군사 훈련 실시, 미국의 김정일 통치자금을 겨냥하는 금융제재를 발표(8.31) 등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 지속으로 미북간 대화부재
- 2010년도 미북관계는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 및 우라늄 농축시설 건설 등 핵능력 강화에 따른 한·미의 대북 압박정책과 북한에 대한 책임 우선 시인요구로 양측의 관계진전이 담보한 상태에서 6자 회담 재개도 불발

### [ 미북관계 전망 ]

-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 정책공조가 강화되고 있어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폭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미·북관계의 진전은 당분간 경색상황이 지속될 전망

- 미국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태에 대해 한국정부와 공조하고 있고, 협상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를 통해 비확산 진전을 원한다 해도 쉽게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한미동맹 강화가 전망되고, 오바마 정부가 상황 타개를 위해 미북간 대화를 검토한다고 해도 공화당 의회가 반대하면서 더욱 강한 대북정책을 주문할 가능성 농후

- 2011년 새로 구성되는 하원에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재지정을 지속 촉구해 온 로스-레티넨 국제관계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

- 따라서 2011년 미·북관계는 미·북 양측의 강경 대응으로,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감행하여 긴장을 고조시킨 뒤 제 3차 핵 실험을 감행하여 판을 키울 것으로 예상

- 미국은 6자회담에 재개되기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는 낙관할 수 없으나 마냥 이대로 갈수가 없는 상황
- 따라서 적절한 기회를 포착,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경색상황을 타개할 것으로 전망

## (2) 일본

### ▶ 2011년도 대내외정책 전망

#### ● 대내적으로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총리 지지율이 25% 전후로 낮은 가운데, 중국·러시아와의 갈등국면에서의 미흡한 외교력과 경제정책 문제 등으로 중의원이 해산되는 등 민주당정권의 정치적 위기 예상
- 일본 국가부채가 GDP의 200%에 육박하고 GDP성장률이 2010년 2.6%에서 2011년에는 1.1%로 떨어지는 등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년도 경기회복 추세가 더더질 것으로 전망

#### ● 대외적으로

- 간 총리의 일본정부는 ‘미·일 관계복원’과 ‘동북아협력외교’를 표방하고 있으나, 이미 발생한 중일, 러일간 영토분쟁의 여파로 외교적 입지가 약화되고 대미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동아시아 경제질서가 중국이 주도하는 ‘ASEAN+3’와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동반자관계(TPP)로 양분되어감에 따라 일본 정부는 대외경제 전략을 놓고 국내외적인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
- ※ 그 동안 일본이 G-8을 통해 아시아경제를 대표해 왔으나 G-20정상회의 개최로 역할이 축소되고 G-2시대 개막으로 미·중역할이 강화되면서 일본의 국제적 위상 및 역내 영향력이 크게 약화

## ▶ 한·일관계 전망

- 일본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견제하기 위해 한·일 협력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
  - 일본측은 한일 우호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 한국정부와 약속했던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허용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조기 해결에 나설 가능성 농후
- G-2시대 개막에 즈음하여 한·일 양국은 역내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데 이해를 같이하면서 한·미 및 미·일 안보협력을 연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전망
  - 한·일 양국은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에 힘쓰면서도 중국이 지역 패권국으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역내 안보현안에서 공동보조를 구축
- 중국의 시장팽창을 견제하고 양국의 시장통합을 통해 자본유치와 시장 확대를 꾀하려는 한·일 양국 정부의 이해가 맞물려 2003년에 중단된 한·일 FTA의 정부간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 농후
  -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일본기업의 부품소재 전용 공단 착공으로 확대된 한일 경제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중단됐던 한·일 FTA의 정부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 북·일관계 전망

- 간 나오토 내각도 자민당정권과 마찬가지로 납치문제 우선해결을

내세우며 대북 경제제재를 유지하는 등 대북 강경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북·일 관계의 경색국면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북핵문제와 북·일 관계정상화, 대북 경제지원을 별개로 추진하지 않고 일본인 납치문제의 진전과 패키지로 다룬다는 입장을 견지

※ 평양선언에서 △국교정상화 조기실현 위한 노력·경주 및 정상화 교섭재개, △이 교섭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 규모와 내용 협의, △1945. 8.15 이전에 발생한 모든 재산과 청구권 상호포기, △일본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 현안(납북자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북한의 적절조치 등 북·일 양정상 합의

- 북한이 일본자금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어,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일본정부가 요구해온 납치문제 재조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형태로 북·일 양자대화가 시작될 가능성도 불배제
  -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6자회담 재개와 함께 대북관계 개선에 나설 경우, 일본도 납치문제 재조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경제제재 연장중단, 국교정상화 협상 재개 등 예상

### (3) 중국

#### ▶ 2011년도 대내외정책 전망

- 대내적으로
  - 2011년은 ‘1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서 지난 10월 열린 17기 5중전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체제가 인정한 ‘성공의 역설’ 즉 개혁개방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둘 전망
  - 이를 위해 중국정부는 수출 지향적 고도성장에서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균형성장에 핵심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기존의 성장위주에서 내수 확대와 분배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전환할 가능성

- 한편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17기 5중 전회에서 당 중앙 군사위 부주석에 취임하고 당내 2인자 자리를 공고화함으로써 2011년에는 18차 당 대회(2012)를 앞두고 5세대 후계구도가 더욱 가시화될 전망
- 또한 금년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강조하는 ‘정치체제 개혁’이 구체적 논의 없이 지나갔다는 점에서 2011년에는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당 내외적으로 정치·사회적 요구에 대한 수용이 시작될 가능성

● 대외적으로

- ‘G2시대’ 등장과 더불어 글로벌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도 ‘중화 부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 무엇보다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 FTA체결을 증대하고 ASEAN+3와 ARF를 비롯한 다자 기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6자회담 정상화에도 힘을 기울일 전망
- 아울러 일본과의 디아오위다오(釣魚島) 분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에도 영토·영해를 둘러싼 문제에서 ‘힘의 외교’를 더욱 더 적극화하고 국제지위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추구해나갈 것으로 예상
- 이외에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취약해진 미국의 빈 공간을

차지하면서 국제질서 다극화를 추동하고 세계2위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정치적 영향력과 군사력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평가

#### ▶ 한·중관계 전망

-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들어 맺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교류를 강화하는 등 협력기조를 지속할 전망
- 그러나 중국은 내심 한·미군사동맹관계의 발전 추세와 한·미·일 협력방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주목할 것이며 중국의 이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엇보일 경우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음
- 또 2011년에도 한·중 양국민의 강화되고 있는 민족주로 인한 국민 정서의 대립문제를 비롯하여 북핵문제와 북한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관리 문제 등이 양국 간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

#### ▶ 북·중관계 전망

- 2011년도 북중관계는 금년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붕괴방지와 김정은 세습후계 체제의 안정적 공고화를 위해 중국의 ‘북한 감싸기’가 재현될 전망
- 중국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강화추세에 있는 한미동맹에 대응하는 한편 김정일 정권의 붕괴방지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 나갈 전망
- 반면 북한은 중국 의도를 간파한 상태에서 중국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對서방세계를 향한 메신저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달성하는데 이용하고자 시도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북한 정권의 속성상 중국이 원하는 개혁 개방과 핵 포기 등에서는 특별한 진전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김정은 주도의 도발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북중간 내면적 긴장은 고조될 가능성

#### (4) 러시아

##### ▶ 2011년도 대내외정책 전망

###### ● 대내적으로

- 메데베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현대화’를 스콜코보 혁신센터 건립 등 경제분야에 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까지 확대시켜 부패 척결과 관료주의 타파, 민주적 제도 강화, 글로벌 금융위기의 조기 극복 등 2012년 차기 대선을 겨냥한 국민적 지지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러시아 특유의 이중권력 양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푸틴 총리 역시 대내 정치사회적 발전을 위해 기강 확립 및 정책적 효과 창출에 진력하는 한편 실로비키(siloviki)와 시빌리키(civiliki) 간 이해조정 등 대내 권력 역학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

###### ● 대외적으로

- “다극화, 다극체제, 다자주의”를 내세우면서 기존의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심화, BRICs 정상회담 정례화,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역할 강화 등 집단적 리더십을 강조하고, 글로벌 금융

- 위기에 따른 세계정치경제질서 재편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실용주의 전방위 외교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미관계 재설정에도 적극 임하는 한편, CIS권에서의 영향력 견지, NATO의 신전략 구상에도 조응, G20에서의 역할제고 등 세계 안보 및 외교 무대에서의 역할과 국제적 지위 향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 한·러관계

- 러시아는 기존의 對남북한 등거리, 균형접근 입장을 견지해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남북한간 군사적 긴장 완화 촉구 등 대한반도 영향력 제고 및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당사자로서 적극 개입해 나갈 것으로 전망
- 한·러수교 20주년의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국 정상회담의 회동, 고위급 인사 교류, 사회문화 교류 확대, 경협 증진, 러시아 현대화 부문에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보다 심화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
-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정상회의 개최와 맞물려 극동시베리아 지역 발전과 연계된 경협 논의가 많아지고, 에너지·우주항공·첨단 정보기술·군사·사회문화 교류 등 제분야에 걸친 협력도 더욱 증진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

## ▶ 북·러관계

- 러시아는 전년도와 같이 완충지대로서 북한의 안보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가운데 북핵문제의 외교적 평화적 해결 강조, 식량 지원, 친선 교류 활동 지속 등 대북 지원·협력을 통한 영향력제고 상황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
- 반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에 있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군사적 안정을 저해한다는 인식속에 UN을 통한 대북비판·제재에 나서는 한편, 북한의 6자회담복귀 촉구전망
- 또한, 양국 정상간 친서 교환, 예술공연단 방문, 임업부문의 협력 강화 등은 지속되어 나갈 것으로 보이나, 나진지역을 둘러싼 중·러 간 경쟁이 심화되고, TSR, TKR 연결사업,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등 남·북·러 3각 경협은 일정정도 한계를 노정할 것이 예상

### 3. 주요 안보현안 및 이슈별 전망

#### 가. 북핵문제

- 북한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이어 ‘연평도 포격사건’을 저지르는 등 남한에 대한 도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핵 도발’ 징후 역시 포착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내년에 3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북한은 다방면에서 3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언제든지 실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은 최근 경수로 건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는 등 핵 도발 징후를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측면이 있으며
  - 국내외 언론 역시 길주군 풍계리 일대의 새로운 갱도 굴착 상황을 보도하면서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바 있음
- 북한은 기존에 실시한 두 차례의 핵실험만으로는 실전 배치가 가능한 내폭형 핵무기 설계 및 제작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 3차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 측면을 보완하는 한편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핵을 이용한 압박전술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다량의 HEU가 확보된 상태라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 가능성

- 따라서 김정은 세습후계체제 공공화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포함한 핵 도발 가능성 및 의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할 것으로 평가
  - 더욱이 한·미·일은 과거와 같은 단계적 협상을 반복하지 않고 포괄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입장이어서 부분적 진전은 무의미
- 결국 북한이 자신의 협박외교가 통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오지 않는 한, 2011년 내에 북핵문제의 의미 있는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다만, 2012년을 앞두고 조급한 북한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과감한 양보안을 제시할 시 미북/남북간 빅딜을 통한 급진전 가능성 불배제

## 나. 남북관계의 불투명성

-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노선과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향후 특별한 전기가 없는 한 2011년의 남북관계는 대단히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
  - 북한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전면 도발은 쉽지 않을 것이나 돌발적 상황으로 인한 국지전 양상이나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은 불배제
  - 위기조성 이후 대화 공세라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전술에 비추어 극적인 대남접근을 피할 가능성은 상존
-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09년 중반기에서 2010년 상반기까지 일시적 대남 유화정책을 철회했음을 시사
  -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로 인해 남북관계를

- 풀지 않고는 미·북관계도 어렵다는 인식하에 대남접근을 추진 하였으며 부수적으로 대규모 대북지원도 기대
-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에 부딪혀 이대로는 이도저도 안 된다는 판단 하에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동시적 위기고조 전술을 채택한 것으로 분석
- 특히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노선은 2010년 9월, 당대표자 회의에서 후계자로 공식화된 3남 김정은의 권력기반 강화작업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추정
    - 6.25 동란 이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최초 포격이라는 예상을 뛰어 넘는 대남 강경 노선을 통해 군에 대한 장악력을 과시하고 군부의 충성을 유도
  -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선택지를 극도로 좁혀 놓았으며 기존 대북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
    - 금강산 피격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도 미해결된 상황에서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남북관계를 거의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
    - 현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의미 있는 조치가 필요
  - 북한이 과거 「도발 → 대화 제의 → 도발」 패턴을 반복해 왔음에 비추어 향후 최고위급 대화 등 대남 평화공세를 펼칠 가능성에도 대비 필요
    - 북한의 대화 자체를 즉흥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최근 군사도발, 북핵문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촉구

- 북한보다도 능수 능란하게 강력한 대북 억제와 대화 제의를 병행하면서 남북관계 국면을 주도해 나갈 필요

#### 다. 한반도 정전/평화체제

-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공격은 확고한 대북 억지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한반도 평화담론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
  - 북한의 서해 도발은 미북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와는 반대로 북한 주장의 허구성을 폭로
  - 북한의 진정한 변화나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 등 제도나 레짐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못함
- 6자회담 자체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장 2011년에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정세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북핵문제가 일정한 궤도에 진입한 다음에야 가능할 것임
- 다만, 북한이 중국과의 공조하에 서해상 군사적 긴장고조를 이유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문제의 동시 논의 공세를 펼칠 가능성에 대비 필요
  - 북한은 2009년 이후 6자회담과 미북 양자 평화회담의 동시 진행 필요성을 강조
  - 중국의 긴급 6자회담 제의에도 일정정도 이러한 의도가 일정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라. 북한정세의 급변 가능성 문제

-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가능성은 주변국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사안으로 주변국들은 북한 급변사태를 동북아질서의 안정을 위협하는 ‘뇌관’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착수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 확보는 언제나 주변국 국가 이익과 밀접히 관련되어 왔을 뿐 아니라 한국으로서도 김정일 건강이상 및 북한 경제난, 세습후계체제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주목해야 할 사태
  - 북한의 급변 사태는 이 지역에서 ‘힘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변국들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 이익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 따라서 일단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확보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
  - 특히 한반도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전략적인 이해를 지니고 있는 중국과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한국정부는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포함한 다양한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북한 급변이 통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준비할 필요
  - 아울러 한국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한·미·중이 함께하는 1.5트랙 급변사태 대화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시도할 필요

#### 마. 동북아 동맹구도/다자안보

- 2010년 동북아에서는 다자간 안보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동맹구조가 강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는 바, 2011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美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 다자안보 논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동북아에서는 한·미·일 대(對) 북·중의 동맹 구도가 강화되는 추세
  -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입장, 3개월 사이 2차례의 북중 정상회담 개최 등에서 나타나듯이 북중간 밀착이 노골화
  - 반면 한미동맹은 전작권 반환 연기, 한미 FTA 타결 등 유례없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일동맹도 하토야마 내각시 불협화음 극복
  - 특히, 중국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공격에 대응한 한미의 서해상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미동맹을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 폄하
- 동북아 국가 간의 영토와 해양 분쟁 격화도 2010년에 나타난 주요 현상 중의 하나
  - 일·중간 센카쿠(釣魚島) 열도 분쟁이 양국간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정도로 격화되었으며 일러간 북방도서 분쟁도 가열
- 동북아 동맹구도의 강화는 미중 G2체제의 부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일정기간 이어질 것이며 중단기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 논의를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의 과도한 군사적 긴장고조 방지와 안보협력 필요성으로 인해 동북아 차원의 다자안보 논의가 재활성화 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동북아 다자안보 논의가 재활성화 될 경우, 이미 6자회담에서 합의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한 동북아 평화·안보 메카니즘 문제가 주된 의제가 될 것임

#### 바. 한미동맹 발전

- 2010년에는 지난해 6월 한·미정상회담의 「21세기 전략동맹」 합의의 연장선에서 한미동맹이 전례 없이 강화
  - 금년 7월 최초로 한미 「2+2」 회담(외교·국방 장관 연석회담)이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10월의 연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는 「확장억지정책위원회」설치에 합의
  - 지난 11월에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여 美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하였으며 향후 북한의 국지전적 도발에도 동맹 차원에서 대응기로 합의
  - 난항을 겪던 한미 FTA가 12월 재타결됨으로써 한·미 양국의 의회 비준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
- 2011년은 이명박 정부에서 발전되어 온 「21세기 전략동맹」 구상이 한층 구체화되고 실행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

- SCM에서 합의한 「확장억제」 개념, 새로운 작전계획(작계 5015), 한미 「2+2」회담에서 채택한 「전략동맹 2015」 로드맵 등 구체화
- 동맹구상의 구체화 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 적용 방식,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현실화 등을 둘러싼 미중/한중간, 그리고 국내적 논란 가능성은 상존
  -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범위와 주한미군 유출입 절차, 한·미 연합 훈련에 일본 자위대의 참가 여부 등이 민감 사항

## 사. 한일 역사·영토 갈등

- 일본 민주당정부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따른 과거사 청산을 시도한다고 하면서도 교과서문제나 독도 문제를 둘러싼 도발을 재개할 경우 한·일간 영토 및 역사 갈등의 재발 불가피
- 다만, 일본 민주당정부는 총리 및 각료 차원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과거사 망언을 최대한 자제할 것으로 보여 옛 자민당정권 때와는 달리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양상이 예상

## 아. 동북아 영토분쟁

- 최근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은 물론 러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이 ‘영토·영해분쟁’에 휘말리고 있음
  - 특히 중국과 일본은 2010년 9월 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로, 러시아와 일본은 11월초 쿠릴 열도문제로 영토분쟁 격화
  - 최근의 동아시아 영토 분쟁은 과거 동북아 국가들이 중심되던

추세에서 확대되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아시아 각국이 연루되고 확대되는 상황을 연출

- 최근 동아시아에서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민족주의의 강화 △해결되지 않은 역사문제 △집단세력으로 등장한 인터넷여론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
  -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발생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 저항의 역사적 경험에 뿌리를 둔 것이며 각국의 민족주의 강화 추세와 더불어 이를 자극하는 인터넷여론이 가세하고 있음
- 최근의 영토분쟁은 역내 각국 간 외교마찰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우리정부로서는 북핵공조를 위해 힘써야하는 관련국 외교라인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
  - 그러나 한국정부는 동아시아 영토분쟁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건설적 중재자 역할을 모색하며, 중·장기적이고 단계별로의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할 필요

## 4. 2011년 정책 추진방향 및 고려사항

### 가. G-20 정상회의 계기, 글로벌 리더십·위상 제고

#### [ G-20 정상회의의 성과 확산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G-20 정상회의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G-20의 모토에 걸 맞는 성과를 거양  
- 개별국가의 실천적 정책약속 등을 포함한 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을 채택하고 개발 의제를 처음으로 다루었으며 환율문제에서도 진전
-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는 우리의 외교적 위상과 국제적 리더십 강화의 계기로 작용하였는 바, 향후 국제기구, 다자외교 무대에서 이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킬 필요

#### [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미션의 성공적 수행 ]

-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1년 특전사 130명이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될 예정
-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은 비분쟁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파병  
- 기존의 평화유지 기능 등을 넘어서 해외 방산 수출에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계기

- 우리군 해외 진출에 시험대가 될 수 있는 만큼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등 파병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현지와 국내에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

[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만전 ]

- 2010년 개최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4.12~13)에서는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2012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핵안보정상회의는 전 세계 50여 개 국가 정상들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로서 G-20 정상회의에 이어 우리의 국제적인 역할 증대의 절호의 기회
-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북핵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치밀하게 준비
- 특히, 북한이 同 정상회의를 자신의 핵국가 지위를 과시하고 핵 군축 주장을 전파하는 기회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
  -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앞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이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과시 예상

나. 21세기 전략동맹의 공고화·가속화

[ 한미동맹의 지역적·세계적 수준의 역할 발굴 ]

- 2008년~2009년에 비전을 제시하고 2010년에 구체화 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을 2011년에는 더욱 공고화 하고 가속화할 필요

- 한·미 간 채택한 ‘확장억제, 새로운 작전계획, 『전략동맹 2015』 등 합의를 이행하는 한편, 2011년 초 한미 FTA를 반드시 비준
- 한미동맹이 지역적·세계적 수준에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창조적 역할을 발굴

#### [ 한미동맹 기반 하에 한·중관계 재정비 ]

- 미국이 중국의 지위를 G-2로 보는 상황에서, 우리도 한·중관계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
  - G-2 시대의 도래는 그들이 한반도 운명을 큰 틀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환기시키고 있는 상황
-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율성이 보다 커질 것으로 판단

#### 다. 북핵문제 및 대북정책 추진

##### [ 스마트한(Smart) 대북정책 추진 ]

-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는 군사적 수단으로 강력히 응징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두는 스마트한(Smart) 방식으로 대응
  - 대남 도발과 평화 공세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북한의 행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은 강제력(Hard Power)과 유인력(Soft Power)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임

- 북한은 향후에도 대남 도발을 자행하면서 태연하게 대화 공세나 남북관계 복원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엄두를 낼 수 없도록 한미연합 자위권 발동 등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면서도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는 방안 검토
  - 서해상 군사적 충돌의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회담, 남북관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등

**[ 북한의 경수로 건설 및 제3차 핵실험에 대한 대비 ]**

- 천안함 사태이후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고 있어 북한이 핵개발 및 미사일 개발에 박차하면서 무모하게 추가도발을 자행 긴장을 고조시킨 후 3차 핵실험을 자행할 가능성
-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을 하게 되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핵무장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 핵개발 의지를 강력히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도 이번 기회에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강구를 고려할 필요

**[ 중장기적 북한 ‘공진화’(co-evolution) 전략 마련 ]**

- 북한은 이미 세계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나 북한이 통제불능의 실패국가(failed state)로 전락할 경우 주변국 모두에 엄청난 부담
- 북한 붕괴는 한국·중국·미국 등 어느 특정국가의 전략적 이득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동북아와 세계 네트워크에 커다란 ‘구조적인 공백’(structural hole)만을 초래

- 동북아의 지전략상 구조상 북한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특정 국가의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것은 불가능

- 김정일 후계체제가 기존 선군노선을 변환시켜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 유인책을 구사

#### [ 북핵 협상국면에 대비, 의제선점과 협상프레임 설정 ]

- 제2차 핵실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공개 등 북한의 연이은 상황 악화 조치로 인해 북핵 협상이 이른 시기에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언젠가는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것임
  - 북한의 핵능력 증대를 방치하거나 군사적인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북핵폐기를 위한 협상은 재개될 수밖에 없음
  - 물론,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여 보상을 제공할 필요는 없으며 효율적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먼저 협상을 요구하도록 한다는 것이 전제
- 북한의 핵개발은 더 이상 부분적 조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한이 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포괄적 해결을 추구
- 선제적 의제와 협상 프레임의 핵심은 김정은 후계체제가 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제시하는 것임
  - 과거에는 북한의 비핵화 거부 논리로 평화체제 문제가 기능했다면 앞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진지

하게 평화체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음

## 라. 북한체제의 급변 가능성 대비 및 통일외교 전개

### [ 북한체제 급변 가능성 대비 ]

- 북한체제 급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정부간 철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
- 현재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는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등을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으나 외교부는 제대로 된 자체계획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부처간 협조체계도 미비한 형편
- 또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조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분야의 한·미간 '작계 5029' 이외에는 이렇다 할 국제공조체제가 구비되지 못한 상황
- 따라서 한·미·중 또는 한·미일 등 주변 강국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대비태세와 공조태세를 갖추기 위한 다자간 1.5트랙 대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 중간자적 역할을 강화내 나가면서 통일 분위기 조성 ]

- 최근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구조는 동북아 정세를 어둡게 예견하게 하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활로를 고민하게 만들
  - 일본은 20세기 잔재 청산이란 미명아래 영토 회복을 추진하고,

-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씩 접근 중
- 중국은 과거 비동맹 세력의 한 축으로서 미국을 견제하는 소련 다음의 군사강국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경제대국이자 미국에 필적할 만한 양대 강국의 위상을 확보 노력

- 이런 상황에서 일·중간의 한국의 가교적 역할이 중요함을 양국에 인식시키면서 한반도 통일에 적합한 동북아 안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

#### 마. 동북아질서 재편 대응 및 역내 다자협상체제 구축

##### [ 동북아 질서 재편 가속화 대응 ]

- 최근 동북아 질서는 중국 부상을 계기로 미·중간 견제, 중·일간 경쟁, 북·중간 밀착, 한·미·일 협력 강화, 영토 분쟁의 격화 등 다양한 흐름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전후 샌프란시스코 체제(1951)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 간의 대립이 근본적 배경
- 동북아질서 재편에서 우리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기본축으로 하면서도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일, 한·중·일 등 다자 협조틀도 강화할 필요
  - 한국의 지전략적 특수성에 착안한 위치 권력론, 한국의 국제정치 경제적 위상을 활용한 네트워크 권력론 차원에서의 전략개발 절실

[ 역내 다자안보 협상체제의 구축 ]

-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얽혀있는 역내 영토관련 갈등 구조는 양자간의 문제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
- 역내 다자안보 협상체제의 구축을 통해 주변 강대국 행태를 상호 결박하는 외교가 필요

바. 역내 주변국 관계 증진 및 현안 해결 노력

[ 한·미·일 정책공조시스템 지속 가동 ]

- 북한 군사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대북정책 조정회의를 개최해 북핵문제 및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3국간의 입장을 조율하면서 대북 공조를 지속
  - 한·미·일 3국 단호한 대북 응징자세를 보여주고, 중국의 대북 자세 변화를 위해 일본 해상자위대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참가를 허용하더라도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제도화는 유보
- 하지만 미·중간 조율로 북핵 6자회담의 조기 재개로 결론 날 경우, 우리 정부는 대일외교의 강화를 통해 향후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태세가 이완되지 않도록 조치
  - 한·일 공조를 통해 미국이 중국측과만 협의하고 우리측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지 않도록 견제

### [ 한·일 역사·영토분쟁의 투트랙(Two Track) 접근 ]

- 현재와 같은 한·일 우호협력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역사 및 영토문제는 정부와 민간 Two Track 방식으로 대응
  - 일본정부 차원의 역사·영토 문제제기는 정부가 직접 나서되 일본 지자체의 독도 편입선언이나 민간인의 활동 등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체나 학계가 나서 대응하는 등 역할분담 체계 구축
- 일본이 의도하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회 쟁점화를 차단하고 우호적 국제사회 여론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일본의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 요청 등 강경 대응
  - 아울러 미래 세대들에 대한 역사교육의 강화가 중요하므로 독도 영유권의 역사성과 당위성, 일본의 역사왜곡사 등 역사교육 강화

### [ 협력과 긴장이 공존하는 대일정책 추진 ]

- 우리 정부의 대일정책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긍정적인 점을 살려, 일본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과 영토 침탈의지 표출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대일외교를 추진
  - 사안과 시기에 따라 전략적 협력과 긴장을 적절히 선택하는 대일 외교정책의 추진이 바람직
- 한편으로 현재와 같이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의 가치를 공유하는 지역전략의 파트너로 규정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추진

-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북한의 군사도발 등에서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은 점차 중요성이 증대
- 다른 한편으로 과거사 문제를 끊임없이 환기시켜 대일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일본의 한반도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
  - 한일관계의 긴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왜곡된 역사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영토 도발을 중단할 기미가 없다는 점에서 대일 경각심을 견지하고 자위대 파견 등 망언과문을 조기 차단

#### [ 한·중 간 잠재적 갈등 이슈에 대한 대비 ]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격상에 따른 양국관계의 발전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잠재적 갈등사안들이 부상함으로써 양국관계 훼손 및 심각한 안보현안으로 등장할 경우에 적극 대비
  -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과 민족정체성 강화에 따른 중국내 배타적 민족주의의 발현은 이미 ‘협한’ 및 ‘반한’감정의 형태로 표출된 바 있으며 이는 내년에도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
  - 현재 한·중 간에는 이어도(離於島)영유권문제, 고대사관련 ‘동북 공정’ 문제, 탈북자문제 등 다양한 잠재적 갈등사안이 내재하고 있으며 양국 국민들 사이의 감정대립도 여전히 경시할 수 없는 상황
  - 특히 ‘천안함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이 ‘북한 감싸기’에 치중함으로써 한중 전략적동반자관계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양국관계의 질적 성장과 신뢰에 치중할 필요

-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수립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외교적 도전을 던져주는 사안으로서 ‘한·미 전략동맹’과 ‘한·중 전략적 관계’ 사이에서 언제든 난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
  - 중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한국이 미국을 중시하고 중국은 홀대한다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으며 현재는 이러한 감정 표출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상황
  - 그러나 한미관계가 군사동맹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한·중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김정은 시대에 대비한 한·중 간 전략적 협력 강화 ]

- 천안함·연평도 외교과정에서 나타난 한·중간 미묘한 경쟁과 갈등이 김정일 후계체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재현되어서는 곤란
- 특히, 한중의 대북 영향력 경쟁을 악용해 김정일 후계체제가 기존의 선군노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한중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
- 한·중은 북한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전략적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외부지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내부적 변화를 촉진시켜 나가는 공동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임

[ 남북한 긴장완화에의 러시아의 중개자, 긍정적 역할 활용 ]

- 러시아는 동북아 국제안보질서의 측면에서 중국과 협력해 미·일 동맹축에 대응하는 전략적 균형을 추구하고 있는 바, 중국의 북한

지원·지지에 대해 일견 동조내지 편승하면서 對한반도정책 전개

- 반면, 한반도 비핵화, WMD 확산 등과 같은 글로벌 안보 사안과 북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UN에서의 논의를 통한 제재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표출
- 우리로서는 남북한 대치 국면의 동북아 안보 질서 속에서 추후 북한도발에의 대응, 남북한 긴장완화, 새로운 출구 전략의 모색에 있어 러시아가 지닌 중개자적 위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긴요

#### [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개발에의 적극 참여와 지원 강화 ]

- 러시아 메드베데프 행정부는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동지역에 대한 개발을 본격화,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 ‘2025년까지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개발 프로그램’을 성안하고 한국기업의 참여를 기대
  - ※ 러시아정부는 同 지역 개발을 정책 우선 순위에 놓고 최근 9년간 16배의 투자 유치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2500억 루블(약 10조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5년간 2조 루블(약 40조원)이 추가로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힘
- 우리가 모색할 경험 사안들로는 블라디보스톡과 이르쿠츠크에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추진, 가즈프롬, 로스네프트 등 국영기업과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통합가스 공급 라인망(UGSS) 건설에의 참여, 극동시베리아 인프라 구축 사업에의 진출 등이 대표적임
- 특히, 후자의 경우 철도 이외에 항만, 도로, 공항 등에의 투자, 통신인프라 및 통신서비스사업진출, 물류복합단지 건설에의 참여,

석유화학산업단지 조성사업 진출 등으로 실질적 경협이 이뤄지는  
사안들로 이에 대한 정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긴급요.<끝>



# 2010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평가와 2011년도 전망

2010. 12

## — 요약

- I. 2010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평가
- II. 2011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 작성자

김일기 고재홍 김환석 변상정 안득기 이기동  
이수석 이형석 채규철 최주활 현성일





## I. 2010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평가

### 1. 북한정세 평가

#### 1) 정치 분야

- 금년 북한은 화폐개혁 후유증을 수습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활용하여 체제결속과 단속에 매진
-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후계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음으로써 김정일의 와병과 노화에 따른 체제의 정치적 불안정과 동요의 예방에 주력
- 최고인민회의의 연이은 개최(4월, 6월)를 통해 국가체제 정비를 완수하고, 제3차 당대표자회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중앙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당·국가체계의 복원을 시도

#### 2) 경제 분야

-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생산성 감소 지속으로 일반 주민들의 생활수준 악화
-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경제교류 감소와 국제사회 경제제재

만회를 위해 대중국 경제의존도 급증

-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동요 및 사회적 이완 방지를 목적으로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및 경제성과 선전에 주력

### 3) 군사 분야

- 올해 북한 군부는 김정은 후계체제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주도 세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어느 때보다도 증대시켰던 한 해로 평가
- 기존의 전면전을 상정한 군사전략 중심에서 완전 탈피,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국지전에 초점을 맞춘 공세적 대남 전략과 전력을 한층 강화
- 김정은 후계체제 등장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을 호도하기 위해 대남 군사 도발에 매진했던 한 해로 평가

### 4) 사회문화 분야

- 북한은 제3차 당대표자회 개최를 통한 김정은의 후계자 공식화 이후 체제단속을 위해 사회통제를 강화
- 김정은의 후계자로서의 정통성과 자질을 강조하기 위해 이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축포야회, 주체철, CNC 성과 등을 업적으로 선전
- 문화외교 강화를 통한 북중·북러 우호관계 공고화를 추진하고 문화시설 개보수·신축 및 공연예술단 신설에 역점

## 2.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평가

### 1) 정치군사 분야

- 북한의 강온 양면전략과 같은 이중적 태도로 인해 남북관계는 진전과 정체의 반복 상태를 겪음
-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넘어 긴장대결국면으로 전환
- 북한은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의도하에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을 핑계로 대남 비난 및 군사적 위협을 반복적으로 언급

### 2) 경제 분야

-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우리 정부의 '5. 24조치'로 남북관계가 악화 되면서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은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함
- 남북관계 경색국면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북지원 및 위탁가공 교역은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
- 개성공단 생산액은 북한 근로자 임금타결 등으로 예년 수준을 보였으나 천안함 폭침 이후 '5.24 조치'로 인해 신규투자 및 투자 확대가 대폭 감소

### 3) 사회문화 분야

- 5·24 대북조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남북

교류사업 전면중단 등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정체상태 지속

- 하반기 북한의 수해지원 요청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이후, 대북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이 실시되는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 일부 재개
-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이산가족 상봉이후 재개되었던 지방 자치단체와 대북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협력도 중단

#### 4) 대외관계

##### 가. 미북관계

- 천안함 폭침 발생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先 천안함사건 해결, 後 6자회담 재개’ 입장을 확인하면서 한국과 함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 이런 가운데 11월,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데 이어 연평도에 대해 무차별적 포격을 가했고 이에 한·미 양국은 대규모 연합군사 훈련 실시 등으로 맞대응
- 이에 중국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의 국면전환을 모색코자 6자회담 재개를 제의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과 함께 이를 거부하면서 공조체제 강화

#### 나. 북일관계

-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결의에 따른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면서 북일관계는 사실상의 단절상태를 지속
- 일본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우라늄 농축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중단과 국제의무 준수를 강력히 요구
- 일본 정부는 한국, 미국 등과 정보교환을 통해 북한의 군사행동 징후에 대한 대응을 강조

#### 다. 북중관계

- 북중 양국은 2010년 9월 정상회담을 개최, 결속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견제하고 ‘6자회담 재개’ 카드를 통해 천안함 폭침 이후 고립국면에서 탈피를 시도
- 그러나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어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마저 발생하자 중국은 한·미 등으로부터 ‘책임대국’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촉구받는 딜레마에 직면
- 이에 중국은 관련당사국들에 특사를 파견, 6자회담 재개를 설득하는 외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결정적인 암초에 직면

#### 라. 북러관계

-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유엔안보리의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을 촉구하고 핵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촉구

- 러시아는 천안함 폭침 때와는 달리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안보리의 성명 채택을 찬성하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
-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제의에 대해서는 지지 입장을 표명

#### 마. 기타 국가와의 관계

- 북한은 어려운 경제난을 반영,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외화벌이 차원에서 대형 조형물이나 건설공사 입찰 등에 참여
-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으로의 미사일 제조기술 및 무기 밀수출이 여전히 존재

## Ⅱ. 2011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 1. 북한정세 전망

#### 1) 정치 분야

- 내년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은을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초고속 승진·임명하거나 당중앙군사위원회 제1 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그 직책을 맡길 가능성이 있음
- 김정은의 권력장악을 국가부문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최고인민회의 12기 4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방위원회에 대한 김정은의 장악 및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

- 체제수호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후계체제 구축작업은 많은 부작용을 속출하여 오히려 체제 불안정을 가속화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음

## 2) 경제 분야

- 지난해의 식량생산량 감소 및 국제사회 경제제재 강화에 의해 식량지원 획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내년에는 식량난 심화 예상
- 안정적 권력세습을 목적으로 7.1 조치 이후 대두된 신흥부유층과 사적 경제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가 예상되며,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선심성 경제선전 강화 전망
- 인프라 공동개발 등 북-중 경제협력 및 교류강화를 통해 만성적인 경제난 보전과 핵문제 및 권력세습 문제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중 밀착 관계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3) 군사 분야

- 김정은 후계체제 출범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군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인선을 비롯한 대규모 장성급 승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
- 북한 군부는 김정은 후계체제의 주도세력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남북관계 경색, 핵무력 강화, 선군정치 지속 등 대내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

- 김정은 후계자에 대한 군부내 충성 경쟁의 심화로 내부 불안정이 가속화될 것이며 돌발적인 대남 도발 가능성 역시 어느 때보다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

#### 4) 사회문화 분야

-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부패간부 사정활동과 범죄자 특별 사면 등을 통한 ‘당근-채찍’ 양면정책을 전개
- 김정은의 정통성과 리더십 확보차원에서 ‘김일성 민족’의 ‘세계성’을 강조하는 등 김일성 가계와 김정은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문화 선전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
- 북한은 ‘김일성 민족’의 민족우위와 남한의 다문화와의 차별성에 대한 이론화 시도를 통해 남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방어논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

## 2.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전망

### 1) 정치군사 분야

- 북한의 강은 양면의 이중적 대남정책 및 연평도 포격도발의 여파로 남북관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체 및 긴장상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
- 군사분야에서는 북한의 국지전 도발가능성이 상존하며,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직접적 침공가능성도 있음

- 중국의 압박 및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대북지원과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다양한 유화책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음

## 2) 경제 분야

-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의 영향으로 남북 경제교류 협력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
-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 엄격한 검토하에 선별적으로 허용 가능성 존재
-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로 인해 신규투자 및 투자확대는 감소

## 3) 사회문화 분야

-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 태도변화,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제시 등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남북교류는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대북지원 단체들의 각종 사업도 전면 중단되어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한 민간인들의 방북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정부가 남북 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사업의 전망도 비관적

#### 4) 대외관계

##### 가. 미북관계

- 천안함·연평도 국면은 2011년에 들어 점진적으로 화해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미·북 양측도 일단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미·북간 근본적인 이견으로 인해 6자회담은 타협의 場이기 보다 자국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회담으로 변모할 가능성 농후
- 요컨대 내년 미북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화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 외에 북핵 협상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나. 북일관계

-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결의에 따른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면서 북일관계는 사실상의 단절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일본 정부는 한국, 미국 등과 정보교환을 통해 북한의 군사행동 징후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전망

##### 다. 북중관계

- 북한의 최대 당면과제는 후계체제의 공고화에 있어 내년에도 적극적인 대중 유착을 통해 중국의 정치적 및 경제적 후원을 유도 하는데 부심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북한은 대중 유착관계를 지속, 북중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견제하는 한편 이를 북핵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
- 한편 중국도 미·중간 경쟁 구도를 고려,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다시 평가하면서 대북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체제의 약화를 방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판단

#### 라. 북러관계

- 러시아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 한국·미국·일본과 중국·북한의 구조속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지속하면서 러시아와의 접촉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

#### 마. 기타 국가와의 관계

- 북한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곳곳의 시설물이나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등 외화 벌이에 더욱 전력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외화벌이 차원에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과 제조기술 전수에도 급급할 것으로 전망

## I. 2010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평가

### 1. 북한정세 평가

#### 1) 정치 분야

- 화폐개혁 후유증 수습 주력
  - 금년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화두로 제시 하였으나, 화폐개혁의 후유증 및 대외·대남관계의 교착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획득하는 데 실패
  - ‘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강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 주력하고 시장통제와 외환거래를 다시 허용
- 4월·6월 최고인민회의의 이례적 연속 개최를 통한 국가체계 정비 완수
  - 4월 12기 2차 회의에서는 12기 1차 회의에서 미진했던 헌법 조문을 일부 개정하여 헌법개정을 완료
  - 6월 회의에서는 내각 총리 교체(김영일 ⇒ 최영림),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기용, 내각 부총리 및 상급 교체를 통해 국가기구 정비를 마무리
- 제3차 당대표자회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통한 중앙당 체계 정비

- 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조한 당 조직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3차 당대표자회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통해 중앙당 체계를 정비
  - 후계시대에 대비한 당·국가체계 복원의 일환이자 권력이양기 내분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당 차원에서의 당·군 엘리트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 마련
- 후계체제 강화를 위한 권력구조 확립
    - 제3차 당대표자회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를 통해 중앙당 비서국을 중심으로 하는 김정일 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앙 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김정은 후계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정치국 중심의 후견체제를 강화
    - 당·군·체제보위기관의 핵심엘리트들이 망라된 당중앙군사위원회 구축 및 김정은을 신설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임명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이용한 체제결속 및 단속에 주력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외부 긴장감을 고조시켜 이를 체제결속의 명분으로 적극 활용
    - 특히, 연평도 포격도발은 후계자의 선군 리더십을 과시하여 노획한 군부 권력엘리트들을 장악하기 위한 호재로 이용
- 체제보위기구들에 대한 각종 시혜조치를 통해 체제이탈 방지 및 안정을 도모
    -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를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로 개칭하고, 김정일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에 대한 격려 방문이 증가

## 2) 경제 분야

- 화폐개혁 후유증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생산성 감소 지속으로 일반 주민들의 생활수준 악화
  - 작년 말에 단행한 화폐개혁의 부작용 발생으로 주민 생활고 심화 및 생산능력 위축
-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북경제교류 감소와 국제사회 경제제재 만회를 위해 대중국 경제의존도 급증
  - 김정일 방중 2회 및 동북 3성 공동개발 추진 등을 통해 대중 교역 및 경제협력 활성화 도모
  -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국제사회 경제제재 강화로 대중 경제 의존도 증가
-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동요 및 사회적 이완 방지를 목적으로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및 경제적 성과 선전 주력
  - 주체철·주체비료·주체숨 및 대계도 간석지 등의 성과를 적극 선전
- 지속적인 생산능력 저하와 화폐개혁으로 인한 북한당국의 경제 운용에 대해 주민 불신 증가

## 3) 군사 분야

- 북한군의 위상 증대
  - 금년 9월 개최된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후계자를 중심으로 당중앙군사위원회를 개편하는 동시에 당창건 65주년 기념

대대적인 군사퍼레이드를 진행

- 선군정치의 지속과 함께 북한군은 새로운 김정은 후계체제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주도세력으로의 지위와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과시

●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군부 주도세력의 변화

- 북한군내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주도세력으로 오극렬, 김영춘, 김명국 등 기존 군부원로들이 후퇴하고
- 이영호, 김원홍, 김영철 등 군부 소장그룹의 약진이 두드러졌던 한 해

● 국지전 전력 및 전술의 강화

- 북한군은 핵·미사일 등 WMD 개발, 대남 우위의 비대칭 전력 등 기존의 군사력 강화 정책을 지속하는 가운데
- 변화된 현실에 맞게 기존의 전면전을 상정한 군사전략 중심에서 탈피하여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도발 등 국지전에 초점을 맞춘 공세적 전략과 전력을 강화

#### 4) 사회문화 분야

● 9.28 당대표자회 개최와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 후 사회통제 강화

- 당대표자회 개최와 김정은 후계자 공식화 이후 사회통제강화 지침이 하달돼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영도자가 생긴다는 희망이나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조성되고 있는 상황

● 강성대국과 김정은 업적 선전을 위한 ‘평양 10만호’ 건설사업 차질

- 강성대국을 선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평양 10만호’

주택건설사업이 시멘트 등 자재 부족으로 차질 발생

- 이 사업은 2012년을 목표로 하는 ‘강성대국 건설’을 과시하기 위해 시작됐으나 현재는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

● 김정은 우상화와 ‘김정은의 배려’ 명목의 조치 시행

- 김정은 찬양가요 <발걸음> 보급, 김정은 생일(1.8)의 국가기념일 지정, 김정은 초상화 등 김정은 우상화 작업과 대형 축포야회, 주체철, CNC 성과 등을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
- 북한의 정권수립기념일(9.9), 당대표자회(9.28), 노동당창건기념일(10.10) 등 주요 정치일정을 이유로 8월부터 금지됐던 친척방문용 중국여행을 11월에 재개하고 돈과 물건 유입을 적극 장려

● 외국문화 유입과 한류붐(남한풍) 단속 강화

- 금년 11월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30만 명을 초과, 북한 공안 당국은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 단속에 혈안, 특히 김정은 3대세습 환경조성을 위한 준계엄 상태 지속
- 올해 1월 ‘썩은 정신’을 가진 이들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130 상무’라는 특별팀을 조직, 외국의 비법적인 복사물과 ‘색정적 록화 테이프’ 등에 대한 단속 강화

● 북중·북러 문화외교 강화 및 문화시설 개보수·신축과 공연예술단 신설

- 북·중 수교 60주년 기념 중국 가극 <홍루몽>, 연극 <네온등 밑의 초병>과 러시아 고전 오페라(가극) <예브게니 오네긴> 창작 공연 등을 통해 문화외교 강화
- 경희극 <산울림> 등 1950~60년대 작품을 재창작하고 체육과학

- 도서관(1.12), 조선미술박물관(4.12),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4.28) 등의 문화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신축
- 삼지연악단과 ‘팝스오케스트라’처럼 클래식 악기로부터 전자기타, 드럼, 색소폰을 갖춘 은하수관현악단을 신설

## 2.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평가

### 1) 정치군사 분야

- 북한의 강은 양면전략과 같은 이중적 태도로 인해 남북관계는 진전과 정체의 반복적 상태를 겪음
- 올해 초 한국에서 발생한 급변사태 대비 계획, 키리졸브 훈련 등으로 북한은 대남비난을 강화하였음
  - 국방위원회의 보복성전(1.15), 총참모부의 군사행동(1.24), 판문점 대표부의 정전협정 및 불가침 합의에 구애받지 않겠다(3.7)는 발언 등 대남강경 태도 표명
- 이 와중에서 북한을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개성공단 임금인상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회담 제의
  - 2월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2월 8일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은 금강산 남측 부동산조사(3.25-31), 금강산내 남측자산 동결, 관리인원 추방(4.23) 등 강경조치 전개
-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넘어 긴장대결국면으로 전환
  - 우리의 5.24조치에 대응해 북한의 조평통은 남한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포(5.25)

- 인민군 총참모부가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쌍방향의 완전 무효화 및 서해 북측 해상분계선 침범시 물리적 타격 등 7개항의 조치를 발표(5.27)

● 하반기에 들어 북한은 수해지원 요청(9.4), 억류 대승호 송환(9.7), 금강산 관광문제를 협의하자고 주장(10.2)했고 다시 재촉하는 통지문을 보내는 등(10.14) 유화정책을 전개

-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 실시(10.30-11.5)되었는데,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하면서 금강산 관광과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활성화를 요구

● 그러나 연평도 도발을 통해 북한은 한반도 긴장국면을 조성, 이후에도 외무성, 조평통 등의 담화를 통해 강경발언을 반복

- 또한 북한은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의도하에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대남 비난 및 군사적 위협을 반복적으로 언급

## 2) 경제 분야

●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우리 정부의 '5. 24조치'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은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함

● 투자협력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북핵문제 미해결 및 남북관계 경색으로 크게 위축됨

-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5.24 조치' 실행으로 신규투자 및 투자확대가 금지됨으로써 투자협력 사업이 위축
- 금년도 협력사업 승인은 5.24조치 이전(개성공단 6건)이거나

금강산관광 협력업체의 도산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에 국한(19건)

<연도별 남북협력사업 승인현황>

구분	'06	'07	'08	'09	'10.11
민간경협	4	6	9	1	19
개성공단	15	163	53	10	6

- 남북관계 경색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역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
  - 금년에는 '5.24 조치'로 남북간 교역이 잠시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임

<연도별 남북교역 현황>

(단위: 만달러)

구분	'06	'07	'08	'09	'10.11
교역규모	1,350	1,797	1,820	1,679	1,781

- 대북지원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지속에 따라 '08년 이후 감소추세를 이어갔으며 금년에는 작년의 절반수준에 그침
  -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역시 대폭 축소

<연도별 대북지원 현황>

구분	'06	'07	'08	'09	'10.11
정부지원	22,740만불 (2,273억원)	20,893만불 (1,983억원)	3,996만불 (438억원)	2,420만불 (294억원)	1,107만불 (128억원)
민간지원	7,088만불 (709억원)	9,568만불 (909억원)	6,460만불 (725억원)	2,858만불 (377억원)	1,787만불 (204억원)
합계	29,828만불 (2,982억원)	30,461만불 (2,892억원)	10,456만불 (1,163억원)	5,278만불 (671억원)	2,894만불 (332억원)

- 위탁가공무역은 현재 약 2억 7천만달러 수준으로 작년에 비해 대폭 감소
  - 특히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5.24 조치'에 따라 6-7월 위탁가공 무역액이 급감하였고 그 이후에도 예년수준에 비해 감소추세가 이어짐

<연도별 위탁가공 현황>

(단위: 1,000달러)

구분	'06	'07	'08	'09	'10.11
교역규모	252,958	329,912	408,309	409,714	277,015

- 개성공단 생산액은 북한 근로자 임금타결 등으로 예년 수준을 보였으나 '5.24 조치'로 인해 신규투자 및 투자확대 대폭 감소
  - 작년 말 남북 해외공단 공동시찰과 금년 8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타결로 안정세를 보임(월 최저임금 5.5% 인상 합의, 57.881달러→60.775달러)

### <개성공단 생산규모 및 입주기업 현황>

(단위: 만달러)

구분	'06	'07	'08	'09	'10.9
생산액	7,373	18,478	25,142	25,647	23,972
입주기업	30	65	93	117	121

### 3) 사회문화 분야

- 5·24 대북조치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남북 교류사업 전면중단 등으로 남북 사회문화 교류의 정체상태 지속
  -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정부는 '5·24 대북제재조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남북교류사업 전면중단 등의 대응책 제시
  
- 하반기 북한의 수해지원 요청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이후, 대북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이 실시되는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 일부 재개
  - 지난 8월 신의주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북한이 유엔에 긴급지원을 요청하자 우리정부는 먼저 대한적십자사 총재명의로 지원의사를 밝혔고
  - 인천과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난 7월 남북교류 재개에 나섰으며 10월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짐
  
-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이산가족 상봉이후 재개되었던 지방자치단체와 대북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전면 중단되면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도 중단
  -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포함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재개는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정부의 대응능력 및 의지를 오판, 결국 민간인 희생을 부른 연평도 포격도발로 이어지게 했음

#### 4) 대외관계

##### 가. 미북관계

###### ● 천안함 사건 이전 북핵문제

- 부시 행정부 임기말 검증문제로 난항에 빠져있던 북핵문제는 2009년 4월~5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제2차 핵실험 감행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봉착
- 이후 중국의 중재 노력 등으로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모색되는 가운데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이 발발하면서 북핵문제 프로세스는 결정적인 암초에 직면

###### ●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사태와 북미관계

-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先 천안함사건 해결, 後 6자회담 재개’ 입장을 확인하면서 한국과 함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 이런 가운데 11월,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데 이어 연평도에 대해 무차별적 포격을 가했고 이에 한·미 양국은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실시 등으로 맞대응
- 이에 중국은 천안함 사건 및 연평도 사태의 국면전환을 모색코자 6자회담 재개를 제의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과 함께 이를 거부하면서 공조체제 강화

#### 나. 북일관계

-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면서 북일관계는 사실상의 단절상태를 지속
  - 일본은 2008년 중국 베이징 6자회담 이후 북한과의 공식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를 지속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일본에 긴장감을 조성
  - 일본의 여야는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우라늄 농축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국제의무 준수를 강력히 요구
-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결의에 따른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면서 북일관계는 사실상의 단절상태를 지속
- 일본 정부는 한국, 미국 등과 정보교환을 통해 북한의 군사행동 징후에 대한 대응 강조

#### 다. 북중관계

- 천안함 사건과 북중관계
  - 천안함 사건은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위기의식을 자극, 양국간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
  - 특히 중국은 한·미 등의 지나친 대북 압박이 現 북한체제의 불안정과 맞물려 자칫 체제붕괴 사태로 이어질 것을 우려, 북중 공조체제 강화 및 대북 지원 확대

- 이에 양국은 금년 9월 정상회담을 개최, 결속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견제하고 '6자회담 재개' 카드로써 천안함 사건 이후 고립국면에서 탈피를 시도

● 연평도 사태 이후 북중관계

- 천안함 사건 및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이어 연평도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은 한·미 등으로부터 '책임대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받는 딜레마에 직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남북한 등 당사국들에 특사를 파견하여 6자회담 재개를 설득하는 외 사태의 국면전환을 위해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

라. 북러관계

- 러시아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유엔안보리 회부에 찬성
  - 천안함 폭침 때와는 달리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안보리의 성명 채택을 찬성
  -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를 방문한 박의춘 북한 외무상에게도 연평도 포격도발을 비난
-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
  -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유엔안보리의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무조건 이행 할 것을 촉구
- 러시아는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에는 동의
  -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 한국, 미국, 일본이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제의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

#### 마. 기타 국가와의 관계

- 북한은 아프리카와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외화벌이에 적극적
  - 2009년 케냐와의 외교관계 수립 등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
  - 나미비아, 앙골라, 우간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와의 교류·협력을 강화
  - 그동안 북한은 나미비아,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과 적도 기니의 각종 건축물을 수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화벌이 차원에서 아프리카 곳곳의 대형 조형물이나 건설 공사 입찰에 참여
  - 북한의 만수대 해외사업부가 아프리카에서 대형 조형물 건축을 수주
  - 세네갈에서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을 건립하고 차드에서도 독립 50주년 기념물 조성 사업 등을 진행
  - 2000년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수주한 각종 공사로 북한은 최소 1억6,000만달러(1791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
- 북한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에 급급
  - 이란, 이집트, 예멘, 시리아 등에 미사일 제조 기술을 전수
  - 아프리카의 우간다,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등은 북한의 무기 밀수출 국가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

## Ⅱ. 2011년도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 전망

### 1. 북한정세 전망

#### 1) 정치 분야

- 후계체제 구축 차원에서 후계자 김정은의 리더십 강화에 주력
  - 제도적 리더십 강화 차원에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장으로 초고속 승진·임명하거나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신설하고 그 직책을 맡길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최고인민회의 제12차 4차 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
  - 인격적 리더십 강화 차원에서 김정은과 관련한 다양한 상징조작 및 우상화 작업을 실시할 가능성
- 시간제약 상황 下 정치적 수요에 따른 경제적 비용 조달위한 제 조치 단행
  - 강성대국 건설 공약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내부예비를 총동원하기 위한 노력동원운동을 전개할 가능성 높음
  - 당 체계의 정비를 완료하고 청년동맹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 이후 당조직과 청년동맹이 주도할 것이며, 특히 청년동맹은 비사회주의그룹운동을 전개하여 충성심을 과시할 것으로 전망

- 내부예비 동원의 한계 상황에서 외부자원의 적극 유입을 위해 대중관계 긴밀화를 바탕으로 6자회담 재개 및 북미관계 개선에 진력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1년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하에서 2012년 ‘강성대국 대문 진입’의 목표달성은 실패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대문진입’의 실패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주장으로 대체하기 위해, 내년 부터 사전포석 차원에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논리는 과학기술중시 노선과 병행하여 강조될 것으로 전망 ⇒ “과학기술중시 노선에 입각한 국방공업의 눈부신 성과를 인민경제 발전으로 전환” 한다는 논리 강조
- 후계자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장악 및 관리시스템 구축
  - 내년에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은이 공식중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을 맡을 수도 있으나 후계자 유일영도체계가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 다른 대안으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인적 일체화를 통해 김정은이 중앙군사위원장 또는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국방위원회를 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가능성 있음.
  - 이원화된 조직을 인적 일체화(겸직)를 통해 지휘·통솔하는 시스템 ⇒ 중국식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중앙군사위원회와 유사한 시스템

-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체제불안정 요인 증가
  - 체제수호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후계체제 구축작업은 많은 부작용을 속출하여 오히려 체제 불안정을 가속화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 있음
  - 김정일 유일지배체제 약화, 권력층의 갈등과 파벌 형성, 정책 결정과정의 혼선, 외부세계와의 대결 증폭, 주민불만의 확산 등이 더욱 가시화됨으로서 체제불안정 요인 증가

## 2) 경제 분야

- 2010년 자체 식량생산량 감소 및 국제사회 경제제재 강화에 의해 식량지원 획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1년에는 식량난 심화 예상
  - 북한의 이상저온 현상 및 수해 등으로 인한 식량생산 감소, 국제사회 지원 감소, 식량 유통체계 혼란 가중 등으로 식량난 심화
  - 2011년 식량생산은 380~390만톤 생산으로 추정(작년 414만톤 대비 20~30만톤 감산)
- 안정적 권력세습을 목적으로 7.1 조치 이후 대두된 신흥부유층과 사적 경제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가 예상되며,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선심성 경제선전 강화 전망
  - 2012년 강성대국 달성 및 김정은 권력세습 안정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통제 강화 예상
  - 화폐개혁과 같은 대규모의 경제적 통제보다는 사유재산 보유 압박을 통한 신흥부유층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 예상
- 인프라 공동개발 등 북-중 경제협력 및 교류강화를 통해 만성적인

경제난 보전과 핵문제 및 권력세습 문제 돌파구 마련을 위한 대중 밀착 관계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대중국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 고립화 해결 도모
- 동북 3성 및 라진특별시 개발 사업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및 북중 경제협력 심화 가능성 고조

- 한국에 대한 안보위협 및 핵문제를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개성공단·금강산 등을 매개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

### 3) 군사 분야

- 북한군에 대한 대규모 시혜조치 단행
  - 김정은 후계체제 등장에 따라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한 대대적인 군승진 인사 단행, 군부 위상 증대 등 북한군에 대한 대규모 시혜가 베풀어질 것으로 전망
- 북한 군부의 충성경쟁에 따른 돌발행동 가능성 증대
  - 북한군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고 후계체제의 주도세력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유리한 대내외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미연합군의 군사훈련 등을 빌미로 핵무력 강화의 정당성, 선군정치 지속, 군사력 강화 등을 북한군의 위상 제고에 활용
  - 김정은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호위사, 보위사, 총정치국 등 군내 감시·통제 부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

- 대남 우위 국지전 전략 개발 및 특수전 전력 증강에 매진
  - 비대칭 국지전략의 개발, 포병화력 증강을 위한 신무기 개발, 침투용 잠수정 개선 및 잠수전 능력 강화, 특수임무 요원 증가 등 특수 전력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 아군 잠수함에 대한 위협과 공격, GP/GOP 아군초소에 대한 침투·포격, 탈북자에 대한 테러 위협, 아축 항공기, 선박에 대한 전자전 공격 등의 위협이 더욱 거세질 전망

#### 4) 사회문화 분야

-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한 ‘당근-채찍’ 양면조치 예상
  - 김정은의 정치지도력 강화를 위해 2010년에 이어 김정은 주도로 부패간부 사정활동과 범죄자 특별사면을 통한 ‘당근-채찍’ 양면 정책을 전개, 親김정은 세력구축과 함께 김정은의 ‘통 큰 배려’를 선전해 민심 획득
  - 김정은 치적쌓기 목적 외에 ‘현대식 아파트’라는 당근으로 핵심 지도층을 끌어안고 불만을 잠재우는 식의 ‘선심성’ 조치와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비전 제시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이어 내년에도 대남 도발행위를 감행, 주민들의 대미·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켜 전쟁 분위기 조성과 ‘수령결사옹위’를 위한 내부결속 계기로 활용
- 사회문화 분야의 ‘세계화’ 부각과 김정은 이상화 작업 가속화
  - 침체된 대형 공연문화의 한계를 ‘혁명예술’이 아닌 외국작품의 창작과 1950~60년대 작품의 재창작을 통해 극복하고, 후계자 김정은의 ‘세련되고 젊은 취향’을 반영한 문화계의 움직임이 예상

- 김정은 후계체제를 지지하고 ‘김일성 민족’의 ‘세계성’을 강조하는 등 김일성 가계와 김정은 이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문화선전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

※ <세계여 조선을 보라>(시), <세계여 우리를 보라>·<세계를 향하여 비약하라 더 높이 더 빨리>(선전화), 삼지연악단의 혁명예술성 평가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세계’와 ‘세계화’를 강조

● 3대 권력세습의 정당성 부각 및 민족주의 담론 확산

- 김정은 생일(1.8)의 국가기념일 제정 후속작업으로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민족주의를 결합해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한 ‘김일성 민족’ 담론으로 3대 권력세습의 정당성을 확산
- 3대 권력세습과 맞물려 ‘김일성 민족’의 민족우위와 남한의 다문화와의 차별성에 대한 이론화 시도를 통해 향후 남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방어논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

## 2.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 전망

### 1) 정치군사 분야

- 북한의 강온 양면의 이중적 대남정책 및 연평도 도발의 여파로 남북관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체 및 긴장상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
  - 존재를 부인했던 우라늄 농축핵개발의 자발적인 공개로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구축하려 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진전되기 어려움

- 군사분야에서는 북한의 국지전 도발가능성이 상존하며,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직접적 침공가능성도 있음
  - 연평도 군사공격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후계체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은 전면전까지는 안가더라도 육해공군력이 동원되는 국지전 까지도 감행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내부의 상황으로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음
  - 내부적으로 김정일의 건강이상, 후계구도,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반발과 경제난으로 체제유지에 취약한 상태
-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의 고립이 깊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무리가 따름
  -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충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김정일 건강이 악화된다면 내부통제력이 제대로 작동될 지 의문
- 따라서 내년 중반기에 미국과 중국의 중재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음
  - 북한 스스로도 중국의 압박 및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대북 지원과 미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다양한 유화책을 전개할 여지가 있음

## 2) 경제 분야

-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의 영향으로 남북 경제교류 협력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
  - 남북교역 규모는 정부차원과 민간차원 모두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규투자 및 기존사업 투자확대가 금지됨으로써 투자 협력 사업도 위축
  - 위탁가공 교역 역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08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대북지원 사업은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해 잠정 중단됨으로써 작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북한의 응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
  -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 선별적으로 허용
-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장기화에 따른 북한의 출입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개성공단 사업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음
- 북한이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 대해 전향적 조치를 취한다면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 가능성도 불배제
  - 북핵 문제의 진전과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조치가 전제되어야함

### 3) 사회문화 분야

-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 태도변화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제시 등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남북교류는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질 것
- 이에 따라 대북지원 단체들의 각종 사업도 전면 중단되어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한 민간인들의 방북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우리정부는 5.24조치 이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개별적 검토를 통해 유지해 왔지만
  - 우리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었던 상황에서 순수 인도적 지원과 그를 위한 민간인들의 방북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 나갈 수밖에 없음
-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우리정부가 남북적십자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사업의 전망도 비관적
  - 그동안 우리측의 이산가족상봉 정례화요구에 대해 북측은 대규모 쌀, 비료지원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연계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음
  -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보도’(11월24일)를 통해 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우리정부의 조치에 대해 “우리도 더 이상 인도주의문제 해결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면서
  - “남조선 적십자사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의 정상화를 비롯한 인도주의사업의 파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 4) 대외관계

##### 가. 미북관계

###### ● 6자회담 재개 전망

- 천안함·연평도 국면은 2011년에 들어 점진적으로 화해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미·북 양측도 일단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미·북간 근본적인 이견으로 인해 6자회담은 타협의 場이기 보다 자국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회담장으로 변모할 가능성 농후
- 그 결과, 북한은 또 다시 회담테이블을 박차고 나가 우라늄농축 핵개발 등을 위협하고 이에 미국은 압박과 경제제재로 응수하는 사태가 재현될 것으로 전망

###### ● 미북관계 전망

- 북한은 후계체제 안정과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 국제적 제재 해제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한층 강경하고 모험주의적인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 농후
- 이에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북 우회적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중국은 지나친 제재에 반대하고 있어 대북 압박은 근본적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
- 요컨대 2011년 미북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화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 외에 북핵 협상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나. 북일 관계

-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면서 북일관계는 사실상의 단절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결의에 따른 경제제재 조치가 지속되면서 북일관계는 당분간 단절상태가 지속될 것
- 일본 정부는 한국, 미국 등과 정보교환을 통해 북한의 군사행동 징후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전망

#### 다. 북중 관계

- 후계체제의 공고화 및 북중관계 전망
  - 북한의 최대 당면과제는 후계체제의 공고화에 있으며 따라서 북한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대중 유착을 통해서 중국의 정치·경제적 후원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북한 3대세습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북한 체제의 불안정이 초래할 위험을 우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대북지원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입장
  - 북한은 중국의 그와 같은 입장을 십분 활용, 최근의 미·중 갈등과 ‘북·중 對 한·미’ 대결 구도를 조장하여 중국의 대북 지원을 극대화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
- 북핵문제와 북중관계 전망
  - 내년에는 북핵협상이 난항에 봉착하고 미북관계가 엄중해질 가능성이 크며 그럴수록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심화될 것으로 판단

- 따라서 북한은 대중 유착을 지속, 북중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견제하고 나아가 이를 북핵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
- 중국도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평가하면서 북한체제 강화 및 대북지원 확대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라. 북러 관계

-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한국·미국·일본과 중국·북한의 구조 속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핵프로그램, 핵실험 등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 회부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
  - 그러나 6자회담재개에는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독자적인 행보를 지속할 것임

#### 마. 기타 국가와의 관계

- 북한은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확대해온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외화 벌이에 더욱 전력할 것으로 예상
  - 북한은 외화벌이 차원에서 아프리카 곳곳의 시설물이나 건설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
  - 북한은 외화벌이 차원에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과 제조기술 전수에 급급할 것으로 전망



# 2011년 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2010. 12

## — 요약

- I. 2011년 세계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
- II. 2011년 국내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작성자

고명덕 박창렬 이두환 이승명 인태환





## 1. 세계경제 전망

- ▶ 2011년 세계경제는 경기부양효과 축소와 교역 둔화가 맞물리고 재정 악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규제 강화 등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효과로 인해 금년보다 다소 둔화된 4%대 초반 성장 예상
- ▶ 세계교역량은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나 세계경제의 둔화, 주요국의 국내 보호무역조치 확대 등으로 인해 증가세는 둔화
- ▶ 국제 유가는 세계경기 둔화,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투기적 수요 감소 등으로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할 전망
-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해외자금 유입 지속, 국제적 절상 압력 등으로 하락 기조가 완만하게 지속
- 달러화는 미 경상수지 적자 확대, 달러공급 과잉 등으로 약세가 지속되고 유로화는 재정불안 여파로 불안정한 등락을, 엔화는 일본경제 악화, 엔 캐리 트레이드 재개, 정부 개입 등의 변수에 따라 상승 둔화 예상

## 2. 국내경제 전망

▶ 경제성장률 : 6.2% (10') → 4.3% (11')

● 내년도 성장률은 2011 상반기 4%대 초반, 하반기에는 4% 중반대를 시현,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한 4.3%대로 전망

▶ 민간소비 : 6.2% (10') → 4.3% (11')

● 민간소비는 소득, 고용상황 등이 정상화됨에 따라 내년도 소득 증가율과 유사한 4.1% 예상

▶ 투자 : 7.1% (10') → 5.2% (11')

● 설비투자 부문은 올해보다 증가율이 대폭 감소하나 건설투자 부문은 올해보다 증가율이 크게 상승, 총투자는 2010년(7.1%) 보다 다소 하락한 5.2% 증가가 예상

▶ 물가

● 201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경제성장, 국제유가 상승, 환율 하락 등으로 인해 올해(3%)보다 높은 3.2%를 기록할 전망

▶ 고용

● 2011년에는 성장세의 소폭 둔화가 예상되나 내수 활성화에 힘입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연간 30만명 내외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실업률은 경기회복과 함께 전년수준과 비슷한 3.6%를 기록할 전망

## ▶ 금 리

- 글로벌 유동성 유입과 인플레이 기대심리 확산, 글로벌 환율대립의 완화 등으로 금리 정상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성장 모멘텀 둔화, 가계부실 확산, 선진국의 양적 완화 등에 따라 시중 금리 상승은 완만

## ▶ 환 율

- 글로벌 달러화 약세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엔화 및 유로화의 상대적 강세가 예상되고 위안화는 대내외적인 강력한 절상 압력과 환율제도 개혁 요구에 의해 추가 절상에 속도를 낼 전망
-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속에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등 국내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하락 기조가 지속되나 폭은 제한적

## ▶ 수출입 및 경상수지

- 2011년 수출은 증가세는 감소할 것이나 2010년 대비 8~10% 증가한 5,000억 달러를 조금 상회하고 수입은 수출 및 설비투자 둔화의 영향으로 12~14% 정도 증가하여 4,700~4,80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
- 수출 둔화가 수입 감소보다 높아 무역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원화 강세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으로 2011년 경상수지 흑자는 2010년(297억 달러)보다 크게 축소된 150~190억 달러로 전망

### 3. 여건 및 불안 요인

#### ▶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 선진국 경제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다시 하락 국면으로 빠질 위험이 상존하고 각국 경기회복 속도 차이가 커지고 자국 중심적 정책대응이 확산되면서 세계경제 회복 둔화 우려

#### ▶ 전 세계적 재정 악화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초래된 재정 악화가 부동산 버블이 심하고 제조업이 취약한데다 국가채무가 높은 대형 적자국으로 확산될 경우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세계경제 위축 요인으로 작용

#### ▶ 보호무역주의 확대

- 국제공조 강화와 개방화에 따른 자유화 압력을 피하기 위해 각국은 은폐된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다자체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양자협상이 증가, 역외국에 대한 차별과 장벽 강화 우려
- 선진국들의 위안화 절상압력이 증대되나 중국의 반발로 환율 갈등이 지속될 경우 선진국과 중국간 통상마찰이 심화되면서 통상환경이 크게 악화 되고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경제를 다시 침체될 가능성 상존

#### ▶ 국제 금융·외환 시장 불안

- 선진국과 신흥국간 글로벌 경제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진전

되면서 대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한편 물가상승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자국 통화가치 방어와 핫머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의 예방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 및 자본 규제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각국의 과도한 외화자본 통제로 인한 부작용 우려

#### ▶ 신흥국 리스크

- 대폭 확대된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고 환율의 과도한 절상압력이 발생, 자산가격 버블이 형성될 경우 급격한 자본 유출시 버블 붕괴에 따른 신흥국 위기 재발 위험
- 특히 중국 경제의 자산시장 거품, 원유 및 원자재의 과도한 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 등 중국발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

#### ■ 국내경제 여건

- 2011년 성장 다소 둔화, 물가 소폭 상승, 미미한 고용증가, 환율 절상 등의 패턴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서 회복국면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
- 고령화, 투자 부진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잠재성장력 감소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
- 무역불균형 개선 압박과 세계경기 성장세 둔화, 신흥시장 경쟁

격화, 주요국 통화에 대한 상대적 원화 절상 등으로 인해 수출 활력이 약화

- 성장률을 크게 초과하는 대출 증가, 특히 PF 대출 관련 부채압력이 큰 건설업과 상환능력이 약한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부실화가 우려되며 금융권 외형확대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천안함 폭침 사태 발생, 연평도 포격사태 발생 등으로 인해 남북한간 긴장이 극도로 고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증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

#### 4.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 ▶ 재정·통화정책 정상화

- 불확실한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한국경제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금융적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2008 금융위기 이후 실시했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복귀
- 글로벌 경제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및 적극적 세입기반 확대 등을 통한 2010-2014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정부가 설정한 재정 건전성 회복 목표치 달성에 주력
- 통화정책은 유동성과 금리의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약해질수록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짐에 대비하여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생산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경로를 재점검하여 물가안정 추구
- 현재 우리나라 금리 수준은 우리경제 여건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인바 정책금리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금리를 정상화

▶ 외환·금융시장 안정화

-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해외자본 유입 확대 가능성이 높은바 외환 시장 교란과 환율 변동성에 대응하여 급격한 외화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과 파생상품 거래 및 투기자본의 불법거래에 대한 감시 감독 및 규제 강화
- 예상치 못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서 오는 대외적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취약한 외환시장을 실물경제에 걸맞게 확충하고 증시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
- 주택담보대출 중 장기 대출·고정 금리 비중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금융시장을 개선하고 DTI 규제를 일관성 있게 유지

▶ 서민·취약계층 중심의 고용지원책 강화

- 학교교육, 전직교육, 재교육 등을 통해 취업 통로를 계층별로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벗어나고 패자부활 기회를 보장하는데 목표를 설정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을 개선하는데 주력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직능 중심의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여성, 퇴직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는 대상별, 계층별, 직종별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전문 직업 능력을 확충
- 청년층과 고령층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이 정체 또는 감소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고용애로사항을 파악

하여 인구계층별로 차별화된 고용정책을 마련

▶ 수출증진대책 강화

- 주요 교역국이 은밀히 강화하고 있는 국내적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련 업계에 신속 제공하고 신흥경제권으로의 적극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모색
- 수출 지역의 다각화 강화, 부품·소재 수출품의 첨단화, 수출 품질 개선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형 수출구조로 전환
- 금융세계 지원 등 국제적 경쟁력이 미진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싱가포르와 대만의 맞춤형 무역전략을 벤치마킹 하여 중소기업에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 중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여 차세대 對中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일본과는 부품 소재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전략사업을 추진
- 대상국 홍보와 교육,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 등 FTA 체결로 접근성 높아진 시장 진출 공약을 위한 지원 강화

▶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

-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업종에 속한 수출기업은 향후 선진국 시장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엄격한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개발에 주력

- 향후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출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생산설비 확충에 노력하고 정부는 이들 기업에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

▶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 철저

- 한미 공조체제, 외환보유고는 유사시 국방력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입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국가신인도 변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

## I. 2011년 세계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

### 1. 세계경제 환경

- ▶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1년만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되면서 회복되는 추세
  - 위기의 조기 극복은 신흥국 경제 호조와 금리 인하, 통화량 팽창, 구제금융, 재정지출 확대 등 각국의 과감한 정책대응의 결과
    - 신흥국 경제는 2010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7.1% 성장(선진국 2.5%)하여 세계경제 비중이 49%로 상승
- ▶ 위기극복 과정에서 후유증 발생
  - 재정팽창정책은 재정위기를, 급증한 글로벌 유동성은 물가 상승을, 금융규제 강화는 경제활동 위축을 초래
  - 신흥국은 수출 주도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선진국은 고실업과 내수부진이 지속되어 저성장을 보이면서 글로벌 불균형 확대, 자본의 집중, 지속 성장의 불안 등 문제를 야기
- ▶ 글로벌 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정상화
  - 선진국의 경기 둔화와 고실업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을 대체하는 정부지출과 신흥국의 수출의존형 성장 패턴으로 선진국과 신흥국간

성장 격차 확대됨으로써 세계경제 지속 성장 위협

-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국 경제가 내수 창출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므로 각국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 유럽 재정위기

- 연초 대두되었던 남유럽발 재정위기는 그리스, 아일랜드 등에 대한 구제금융과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설립으로 일단 진정되었으나 재정 건전성 악화로 금융 불안 지속
  - 2009년 EU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GDP 대비 각각 6.8%, 74.0%로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

#### ▶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 위축

- 위험투자성향 약화로 금융중개기능이 보수화되고 투자활동이 위축되면서 금융산업 성장세는 물론 실물경제 진작 효과도 감소

## 2. 세계경제 전망

#### ▶ 성장력 약화

-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경기부양효과 축소와 경기 회복세 및 교역 둔화가 맞물리면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4%대 초반 전망
- 글로벌 위기가 해소된 이후 재정 악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저성장 기조로 전환

- 점진적인 디레버리징과 정책 정상화,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 글로벌 수요의 균형화 등에 의해 잠재성장률 이하의 U자형 회복 예상

### <2011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Global Insight	KIEP	삼성연	IMF	골드만삭스
3.2%	3.5%	3.6%	4.2%	4.6%

### ▶ 세계무역 증가세 둔화

- 2011년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세계경제 둔화, 미국경제의 회복 부진 및 중국의 내수성장 위주 정책으로 2010년(11.4%)에 비해 4.4%p 하락한 7.0%에 그칠 것으로 전망(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0.10)
- 주요국의 국내 보호무역조치 확대, DDA 협상 진전 여부, 각국의 FTA 체결, 보호무역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성과 등 증감요인이 혼재하면서 세계무역 추이를 결정하는 주요변수로 작용

### <세계교역량 전망>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세계교역량	2.9	-11.0	11.4	7.0
선진국수입물량	0.4	-12.7	10.1	5.2
개도국수입물량	9.0	-8.2	14.3	9.9

## ▶ 국제 유가 소폭 하락

- 세계경기 둔화, 금융규제 강화에 따른 투기적 수요 감소 등으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할 전망
- 달러 약세, 이란 제재 본격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 멕시코만 석유유출 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심해유전 개발 제한 등에 따른 공급 위축 등이 유가 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

## ▶ 국제 환율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해외자금 유입, 국제적 절상 압력 등이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해외자본 유입 규제, 국제금융 시장 불안, 유럽 재정위기 등이 상승 변수로 작용하면서 완만한 하락 기조 지속
- 달러화는 미 경상수지 적자 확대, 달러 공급 과잉, 위안화 절상폭 미흡 등에 따라 약세 지속
- 유로화는 유럽 재정위기가 최악국면은 면했으나 국채 발행 및 상환 차질, 재정적자, 저축은행 부실 등 재정취약국가들의 불안 요인이 여전하여 불안정한 등락이 예상
- 엔고 현상은 일본경제 악화, 엔 캐리 트레이드 재개, 일본정부 개입 등의 변수에 따라 다소 둔화되고 위안화는 국제사회의 압력, 물가 불안 등 대내적인 요인으로 인해 4% 내외의 소폭 절상 예상

## [ 미국 ]

### ▶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나 성장률은 2% 중반 유지 전망

-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기침체 국면은 벗어났으나 금융부실이 여전히 잔존하고 고용시장 및 주택시장의 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 위축이 지속되어 경기 회복세 약화
- 최근 경기 둔화는 위기 전 과열되었던 소비 및 투자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위축되었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더블딥 가능성은 미약
- 향후 경기회복은 현재 고용조정기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미국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는 속도에 좌우

### ▶ 경제구조가 정상화될 때까지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저금리 정책 기조와 양적완화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 유럽 ]

### ▶ 금융 불안, 재정 긴축 및 역내교역 감소 등으로 성장세 둔화

- 유로지역은 GDP 대비 재정적자를 2010년 6.3%에서 2013년까지 3%이내로 감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1년 성장률이 0.5~0.7% 둔화되고 수출증가율도 -1.7%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추정
- 수출중심국 경제성장이 가져올 내수확대 효과와 재정 긴축에 따른 내수 위축 효과가 상충적으로 작용할 전망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 재정취약국가와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적자국의 성장 둔화와 재정 불안이 위험요소로 작용

## [ 일 본 ]

### ▶ 성장세 급락

- 2010년은 전년 마이너스 성장의 기저효과, 정책효과, 수출 증가 등에 의해 호조의 성장이 예상되나 2011년은 이러한 요인 대부분 소멸하거나 약화되면서 1% 이하의 저성장 전망
-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개인소비가 계속 미약할 것이며 세계경기 둔화, 엔고 등의 영향으로 수출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

## [ 중 국 ]

### ▶ 긴축정책과 선진국 성장 둔화, 위안화 절상 등에 따른 수출증가세 둔화로 인해 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것이나 9%대 성장 유지

-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가 예상되나 민간 투자 및 소비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어 급격한 경기 둔화 가능성은 미약
  - 2010년 3/4분기 소비재 판매와 고정자산 투자가 각각 18.3%, 24.5%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
- 정부가 주도하는 SOC 및 개발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3.5~4%)가 성장세 유지에 주요요인으로 작용
  - 중국 정부는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을 통해 중장기적인

내수 확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 물가 및 부동산 가격 불안이 계속됨에 따라 기준율 및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적 조정이 예상되나 급격한 긴축 가능성은 미약

## [ 인 도 ]

### ▶ 2011년 성장세 소폭 둔화

- 세계경기 둔화, 인플레이 압력 해소를 위한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및 투자 감소, 달러 약세와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입 증가에 의한 루피화 절상으로 수출 둔화 등이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
- 국영기업 민영화, 소매유통 및 군수산업에 대한 FDI 개방 등 정부의 친시장적 경제정책 기조 확대에 성장 여건은 양호

### ▶ 인도 시장 내 경쟁 심화

- 2011년 일본·인도 FTA 발효로 한·인도 CEPA의 인도시장 선점 효과가 약화되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과 일본은 인도 수입시장 점유율이 각각 2.8%, 2.7%로 비슷하며 전기기기, 기계, 철강, 자동차부품 등 주요 수출품목도 유사
- 현재 인도는 세계 각국과 전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인도시장 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 ASEAN ]

- ▶ 수출과 내수 회복에 힘입어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 상승률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경제 전반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 러시아 ]

- ▶ 유가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투자 회복세가 지속, 4%대의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나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수입 증가에 의한 흑자 축소, 세계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유가 변동성 등이 리스크로 작용

## [ 브라질 ]

- ▶ 올해 경기부양책 효과 및 대규모 인프라 개발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1년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경기부양책 감소로 인한 소비 둔화 등에 의해 성장세 둔화
- 성장촉진계획, 고속철 사업, 심해유전 개발,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준비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힘입은 투자 증가가 성장세를 계속 견인할 것으로 전망
- 브라질 신정부는 국가주도의 산업정책 기조로 향후 4년간 공공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거래세 확대 등 해알화 절상 억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 3. 주요 변수 및 불안 요인

#### ▶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 각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자국 중심의 경기부양책과 출구전략이 차별화되고 이에 대응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확산되면서 세계경제의 둔화 가능성 및 불확실성이 증대
- 각국의 경기부양책 종료 후에도 내수침체 지속, 유럽 재정위기와 은행문제 해결 실패 및 채무 재조정에 따른 디레버리징 가속화, 미국과 유로지역의 고용부진 장기화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재위축의 우려도 심화

#### ▶ 유럽 재정위기 확산

- 재정 위기가 스페인, 포르투갈 등 부동산 버블이 심하고 제조업이 취약한데다 국가채무가 높은 적자국으로 확산될 경우 이들 국가의 높은 경제규모로 인해 유럽경제 전체가 후퇴할 가능성
- 유럽 재정위기는 역내 흑자국과 적자국간 불균형, 통화정책은 ECB가, 재정정책은 각국 정부가 행사하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유럽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우려
- 재정 악화 충격은 금융위기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전화 지연될 경우 시간이 가면서 재정위기가 계속 재현될 가능성 상존

## ▶ 금융규제 강화

- 자국 통화가치 방어와 핫머니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 예방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 및 자본 규제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각국의 과도한 외화자본 통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
- G20 정상회의에서 핫머니 유출입 규제에 합의함으로써 외화 유출입 규제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대내외 금융규제 강화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
- 신흥국들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금융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환율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시장 개입 확대

## ▶ 신흥국 및 중국 리스크

- 선진국의 초저금리와 양적완화정책으로 대폭 확대된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자산가격 버블 형성된바 급격한 자본 유출시 버블 붕괴에 따른 신흥국 위기 재발 우려
-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크게 미흡
- 중국은 경제, 금융, 자원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위상이 증대되면서 미국 등과 각종 경제 마찰이 발생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
- 현재 중국 경제의 자산시장 거품, 원유 및 원자재의 과도한 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 등 중국발 글로벌 리스크가 상존

- 중국은 위안화 절상과 달러화 약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보유 달러화로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의 과잉수요를 정책적으로 실행

#### ▶ 보호무역주의 확대

- DDA 타결 지연 등으로 WTO 다자체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수출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FTA 등 양자협상이 증가하고 있어 역외국에 대한 차별과 무역장벽이 강화될 전망
- G20의 보호무역조치 동결 합의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자국의 고용안정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반덤핑, 보조금, 보복관세 등 ‘은밀한 보호무역조치(murky protectionism)’를 강화
  -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2009.9) 이후 총 357건의 보호주의적인 차별적 규제조치 신규 도입
-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이 달러 약세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외환시장 개입도 확대되면서 국가간 환율 갈등과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이 대두될 우려도 확산
- 글로벌 불균형 개선을 위한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위안화 절상 압력과 중국의 내수 확대를 통한 균형성장 전략 등으로 위안화는 점차 절상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의 반발로 환율 갈등이 지속
- 환율 갈등이 지속될 경우 선진국과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

되면서 대외수출환경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자국경제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세계경제를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뜨릴 위험

-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비관세 무역 장벽 강화,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 등 무역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의 반덤핑 관세 부가 건수가 2008년 79건에서 2009년 107건으로 급증하였고 2010년 상반기 예비 및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수치는 개도국 143건, 선진국 197건을 기록

#### ▶ 금리 및 환율 변동성 확대

- 글로벌 유동성 증가 및 신흥시장 자금유입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되고 환율의 과도한 절상압력 발생 가능성
- 선진국과 신흥국간 글로벌 경제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진전되면서 대외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한편 물가상승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금리 및 환율 괴리 및 변동성이 확대
- 견실한 경제 펀더멘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빈번해지면 환율 절상 및 절하 속도가 빨라져 외환시장의 불안정 초래
- 향후 추가적 금리 인상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경기 둔화 우려를 키우고 글로벌 유동성의 국내 유입 및 원화 강세 압력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유럽 재정위기가 현재 군소국에서 스페인 등 대국으로 확산될 경우 유로화 가치 하락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위험

- 긴축정책에 따른 중국의 내수부진은 국내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달러가치의 강세로 인해 원화가치 상승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의 실행과정에서 환율 갈등의 재연과 자본유입 확대에 의한 글로벌 유동성 팽창이 자산가격 버블을 초래할 우려

#### ▶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대

- 경상수지 흑자와 견조한 경제 펀더멘트를 바탕으로 원화 강세에 따른 차익기대에 힘입어 외국인 투자자금이 증가함으로써 해외 부문의 유동성 공급이 대폭 확대
- 해외 유동성의 지속적 유입은 국내 통화정책의 효과를 상당부분 희석시켜 자산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을 유발하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대외 불확실성과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등으로 금리 정상화 속도가 제한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시중자금의 단기 부동화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초래될 우려
- 국내 주택시장의 부진,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취약계층 중심의 가계부실 확산 우려, 고용회복의 미흡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
- 주요국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자국의 통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는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될 위험이 상존

- 미국은 중국에 대해 환율 조작국 지정 위협 등을 통해 위안화 절상 압력을 높이고 있으며 일본은 2010년 9월중 엔화가치의 급격한 상승에 대응하여 2조엔 이상을 투입하여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
- 향후 미국 등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이 마감되고 급속하게 국내 유입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급속한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 4. 대외정책 방향

##### ▶ 세계경제 성장 둔화에 대비

- 선진국 경제의 더블딥, 유럽 재정위기 확산 등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수출 증대, 내수 확대, 외환 시장 안정 등을 위한 방안 강구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내수산업간 차별 제거, 내수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내수의 성장기여도를 높여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도모

##### ▶ 신흥국 버블 붕괴에 대비

- 정부는 금융안전망 구축, 자본유출입 통제 등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비하는 방안에 주력하고 기업은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비상출구계획 수립 등 대응체제 마련
- 중국의 성장세 유지에 내수 개발 성공 여부 및 고성장이 한계에

달했을 때 점진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바 이에 대한 변화를 주시하고 대응책을 강구

- 한·중·일 3국간 호환적인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상당기간 아시아의 성장을 견인할 중국이 내수 확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우리 중간재 및 자본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주력

#### ▶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비

- 주요 교역국의 국내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기업들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하고 BRICs, ASEAN, 중앙아시아, 남미 등 신흥경제권으로의 수출 다변화에 주력
- 한미 FTA, 한·EU FTA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비준에 주력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상대국 보호무역조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중국, 일본 및 여타 주요 교역국과의 FTA 협상도 적극 추진
- 2011년 주요국들이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비하여 우리의 전략 및 행동계획을 철저히 준비

#### ▶ 국제적 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대응

- 석유화학, 자동차 등의 업종에 속한 수출기업은 향후 선진국 시장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엄격한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제품개발에 주력
- 향후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출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생산설비

확충에 노력하고 정부는 이들 기업에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확대

#### ▶ 지속 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선진국, 신흥국, 개도국간 성장 격차로 인해 국제적 갈등이 심화되고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바 모든 그룹이 참여하는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이해 균형을 추구
- 특히 현재 세계경제 관리를 주도하는 G20체제가 효과적인 협력 채널로 발전하는데 주력하고 사무국 유치, 아시아 및 신흥국 그룹 구성 등 우리의 영향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강구

#### ▶ 합리적인 재정 건전화 추진

- 재정정책 정상화를 위해 세입기반 확대 및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출효율성 제고 및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등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 국가채무비율 등 절대적 기준보다는 시장에서의 국채소화 능력, 재정 악화 속도 등 우리 여건에 상응한 재정 건전성 기준 확립
- 단기외채비율 등 직접적인 위협 요인을 중심으로 국가채무를 산정하고 중장기적 재정 합리화 계획에 기초한 재정 건전성 확보

#### ▶ 외환·금융시장 안정성 강화

-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해외자본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금융기관 외환 안정성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 급격한

## 자본 유출입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

- 금융위기의 주범인 은행의 대외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외채조달 부담금 등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유사시 이를 안정기금으로 활용
- 평소 국내의 과잉 외화자금의 단기성 해외투자를 확대하여 급격한 외화자금 유출시 이를 상쇄하는 수단으로 대비
- 환헤지, 선물환시장 규제 등 시장 위축 및 왜곡을 유발하는 규제는 지양하고 시장친화적인 외환시장 관리방안 강구
- 높은 환율 변동성은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외국인투자 비중에 기인하므로 급격한 외화유출입을 유발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제거

## II. 2011년 국내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 1. 국내경제 전망

가. 경제성장률 : 6.2% (10') → 4.3% (11')

- ▶ 내년도 성장률은 2011 상반기 4%대 초반, 하반기에는 4% 중반대를 시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근접한 4.3%대로 전망
- 주요 국내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성장률을 3.8~4.5%대로 전망한 가운데 특히 KDI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된 성장을 바탕으로 4.2%의 성장률을 예상

####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11년 GDP 성장률 전망치>

삼성연	국회예산 정책처	LG연	한경연	KDI	현경연	OECD	IMF
3.8%	3.9%	4.0%	4.1%	4.2%	4.3%	4.3%	4.5%

-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에서 탈출하면서 2010 상반기 7% 중반대의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성장 속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진입
- 주요국 경기부양 효과 약화로 인한 세계경기 둔화, 수출 환경 악화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국내 부동산 경기 둔화가 지속

되면서 가계 부채로 인한 내수 회복세 둔화도 예상

- 끝으로 당초 예상(5%) 보다 높아진 올해(6.2%) 경제성장률로 인해 기저효과가 발생, 내년도 전망치가 낮아진 측면도 존재
- 남북관계 긴장 고조, 선진국과 개도국 경기 동시 위축,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급변 사태 등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성장률 추가 하락 가능성

나. 민간소비 : 6.2% (10') → 4.3% (11')

- ▶ 민간소비는 소득, 고용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정상화됨에 따라 내년도 소득증가율과 유사한 4.1% 증가를 예상
- 내수 경기가 내년도에도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수출·내수의 상승세가 고용 증가세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심리 상승으로 이어져 내년도 민간 소비는 최소 4%대를 유지할 전망
- 저금리, 양적 완화정책의 영향으로 과도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내년도에 급격한 금리 상승과 맞물릴 경우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면서 2011 민간소비가 3%대 하락도 가능
- OECD는 가계부채수준이 높고 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이라 금리 상승시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가능성 제기

다. 투자 : 7.1% (10') → 5.2% (11')

- ▶ 설비투자 부문은 올해보다 증가율이 대폭 감소(25.6%→8.5%)하나 건설 투자 부문은 올해보다 증가율이 크게 상승(-1.4%→3.4%), 총투자는 2010년

### (7.1%) 보다 다소 하락한 5.2% 증가가 예상

- 설비투자는 내년도에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추가 투자 수요가 크게 둔화되고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2011년에는 8.5% 증가에 그칠 전망
- 건설투자는 미분양 아파트 축소, 경기회복에 따른 주택 수요 확대 등으로 민간부문 건설투자 부진이 올해보다 완화되면서 3.4% 증가 예상
- 내년도 수출 증가세 둔화, 출구전략 집행에 따른 금리 상승 등이 설비투자 증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SOC예산 축소에 따라 감소할 것이나,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소형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민간부문 건설투자 확대 및 2010 마이너스 성장(-1.4%) 기저 효과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 예상

### 라. 물 가

- ▶ 환율하락은 물가상승을 다소 억제할 것이나 전세가격 상승과 경기회복으로 인한 수요압력 등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며 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단기적인 불안요인도 가중
- 이에 따라 201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고 특히 총수요 압력으로 근원물가는 거의 1% 포인트 더 높아질 전망

## 마. 고용

- ▶ 2011년 고용은 경제성장세의 둔화와 공공일자리 감소로 인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나 견실한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민간서비스 부문에서는 뚜렷한 회복을 보일 전망
- 실업률은 내수 활성화, 수출 둔화, 출구전략 등 일자리 창출과 감소요인이 혼재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대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바. 금리

- ▶ 국내 기준금리의 완만한 인상 속도 및 미국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 등 의도적인 저금리 정책에 힘입어 2010년 하반기 국내 금리는 경제 펀더멘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
-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 재하강 리스크가 부각되고 양적완화정책의 시행 결정 및 글로벌 환율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의 금리 정상화 속도가 부진한 모습을 시현
- 국내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 기대에도 불구하고, 남유럽 재정위기 발생,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 부진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중금리는 저금리 수준을 지속
- ▶ 선진국의 통화팽창 정책에 의한 글로벌 유동성 유입과 인플레이 기대심리 확산 우려로 금리 정상화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2011년 국내 금리는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세와 인플레이 기대심리 확산, 글로벌 환율대립의 완화

등으로 금리정상화 지속이 예상되나 국내 성장 모멘텀 둔화, 가계부실 확산,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 등에 따라 시중금리 상승은 제한적

- 2011년 상반기에는 국내 성장률 하락, 완만한 금리정상화 속도와 함께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 이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등 자본 유출입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2011년 하반기에는 중장기적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 가능성으로 인해 완만하지만 전반적으로 소폭의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
- 물가상승 압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선진국 경제여건과 통화정책, 정부의 환율과 관련된 입장 등을 감안할 때 정책금리의 인상 속도가 빠를 것을 기대하기는 난망

<주요기관 국제금리 전망(미국 국채 10년물, %)>

전망 기관	2010	2011	
	Q4	Q1	Q2
Barclays	2.40	2.50	2.60
Bank of America	2.00	2.25	2.40
Deutsche Bank	2.00	2.00	2.75
Morgan Stanley	3.00	3.00	3.50

사. 환 율

- ▶ 미국의 부진한 경기회복 속도, 추가적인 양적완화조치 시행, 글로벌 불균형에 따른 환율조정 압력 등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기조가 지속

## 되는 가운데 엔화 및 유로화의 상대적 강세가 시현

- 금융불안으로 인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재현이 환율변동성 확대와 외환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 지대
- 미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환율절상에 대비, 신흥국들은 경쟁적으로 외환시장 개입 및 자본유입 통제에 나섬으로써 글로벌 환율 갈등이 심화되고 통화가치의 급등락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 유로화는 글로벌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재정위기와 경기부진 현상이 부각되면서 달러화 대비 소폭 강세를 보일 전망
- 유로화는 그리스와 아일랜드에 이어 스페인 등 잠재적인 남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통화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나 흑자국의 선방 및 달러 약세로 인해 달러 대비 강세를 시현
- 엔화는 일본 정부의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회복 부진 및 추가적 양적완화 조치에 따라 달러화 대비 강세를 지속
  - 글로벌 불균형에 의한 조정압력, 달러화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리스크 등이 절상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엔고에 따른 일본의 경상수지 감소, 과도한 공적부채 등으로 추가적 엔화 절상은 제한적
- 위안화는 미국 등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외적인 강력한 절상 압력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내수중심 성장모델 전환 등으로 환율제도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추가 절상에 속도를 낼 전망

<주요기관 유로화·달러 환율 전망>

전망 기관	2010	2011	
	Q4	상반기	하반기
Barclays Capital	0.72	0.74	0.77
Bank of America	0.80	0.77	0.80
Deutsche Bank	0.75	0.75	0.80
Morgan Stanley	0.68	0.69	0.74

<주요기관 엔·달러 환율 전망>

전망 기관	2010	2011	
	Q4	상반기	하반기
Barclays Capital	82	85	89
Bank of America	79	78	83
Deutsche Bank	75	75	78
Morgan Stanley	81	84	88

- ▶ 2011년에는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등 국내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트를 기반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나 하락 폭은 제한적
- 글로벌 달러화 약세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예상
- 반면 기대하지 못한 대외충격의 발생으로 인한 금융불안 재현 시 달러화 가치가 반등하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성은 클 전망

- 더욱이 글로벌 경기회복세의 둔화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축소와 환차익 기대 감소 및 차익거래의 유인 축소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세 둔화는 환율하락 폭을 제한할 전망
- 특히 북한의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외 악재와 더불어 일시적으로 원화환율의 급등세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판단
- 따라서 2011년 원·달러 환율은 대체로 1,050-1,100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

#### 아. 수출입 및 경상수지

- ▶ 2011년 한국의 수출 증가세는 감소할 것이나 2010년 대비 8~10% 증가한 5,000억 달러를 조금 상회할 것으로 전망
- 내년도 세계경제 회복 둔화에 따른 세계교역량 감소와 원화강세, 기저효과(base effect)에 따른 수출 증가율 감소가 예상되나,
  -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향상, 신흥개도국 시장의 성장세 지속 등에 힘입어 2010년에 비하여 수출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내구소비재의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관련 부품의 수출이 둔화될 전망이며 무역수지 흑자 축소와 원화가치 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이 다소 약화되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반도체와 LCD 등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은 내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으나 일본, 대만 등의 공급확대로 수출단가 하락 지속

-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경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부양효과가 사라지면서 자동차 수요의 회복이 지연, 2010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중국,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개도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고 해외 현지생산 증대에 따른 OEM부품 및 보수용 부품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선박의 경우, 세계 선박건조량이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한국의 대형건조사의 건조량은 소폭 증가할 전망
- 일반기계의 경우,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수요 둔화가 예상되나, 신흥시장국의 설비투자 지속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철강과 석유화학의 수출은 투자 조정을 통해 경기 확장 속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중국의 수요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2011년 한국의 수입은 수출 및 설비투자 둔화의 영향으로 12~14% 정도 증가하여 4,700~4,80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전망
- 내년도 수입 증가율 둔화는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와 함께 원유 소비의 소폭 증가에 기인하며, 또한 수출의 수입유발효과가 커진 상황에서 수출 감소는 수입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IT산업의 설비투자가 내년도부터 조정국면에 진입하면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관련 중간재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수출 둔화가 수입 감소보다 높아 무역수지 흑자가 축소되고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으로 2011년 경상수지 흑자는 2010년 (297억 달러)보다 크게 축소된 150~190억 달러로 전망
- 수출 증가세 둔화와 수입의 수출보다 빠른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는 100억 달러 정도를 축소된 32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상
-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해외여행 증가, 해외법인의 사업서비스 수요 증대 등으로 2011년에도 서비스수지 적자가 150~180억 달러 정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OECD는 한국의 경상수지가 2011년에는 250억 달러, 2012년 28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2010. 12. 3)

## 2. 여건 및 불안 요인

### ▶ 성장 여건

- 선진국 경기는 내년 중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개도국도 내수 중심의 안정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둔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의 수출 활력은 뚜렷하게 저하될 전망
- 향후 수요확대가 불투명해지면서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되고 건설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건설투자는 감소하나 고용과 임금 회복으로 소비는 상대적으로 둔화폭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성장 활력의 하락은 내년 초반까지 지속되다가 하반기 이후 세계 경제 상황이 다소 안정되면서 회복국면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위기 이전의 연평균 성장률(4.7%)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

#### ▶ 수출 여건 악화

- 수출 활력이 세계경기 성장세 둔화로 인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주력 제품인 내구소비재의 대기수요가 일단락되면서 관련 부품의 수출도 둔화될 전망
  - 반도체, LCD 등 IT제품은 일본, 대만 등의 공급확대로 수출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또한 철강과 석유화학의 경우 중국의 긴축 및 경기조절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개도국 시장 진출에 소홀했던 일본과 구미 기업들이 신흥시장을 잡기 위해 현지화 전략을 크게 강화하고 환율 절상 등 기업의 수출 경쟁 여건도 크게 악화될 전망

#### ▶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 선진국 경제는 세계적 정책 공조,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금융안정화 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침체를 벗어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경기 회복 능력이 아직 미약해 다시 하락 국면으로 빠지는 더블딥 위험 상존
- 그러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양적완화정책 재실시를 고려하고 있거나 출구 전략 추진을 연기하고 있어 선진국 경제가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40%)
- 일례로 오바마 대통령은 주택경기 재 위축, 고용시장의 회복 지연

등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더블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3,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의회에 이미 제안한 상태

- 단 미국의 빠른 경기하강, 남유럽의 재정위기 재현, 중국의 긴축정책 강화 등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더블 딥 가능성도 배제 곤란

### ▶ 전세계적 재정 악화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재정이 급속히 악화,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
  - GDP 대비 미국의 재정적자: 2008: 6.7% → 2009: 12.9% → 2010: 11.1%
  - GDP 대비 유로지역의 재정적자: 2008: 1.9% → 2009: 6.3% → 2010: 6.5%
- 특히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확산되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OECD도 일부 OECD국가들의 재정 위기 재발을 내년도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로 인지
  - 그리스,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재정 긴축이 본격화되면서 유럽 전역에 여파가 확산중이며 향후 스페인, 포르투갈의 재정위기는 세계경제 회복의 커다란 위협 요인
- 세계 주요국의 추가 재정지출 여력이 약화됨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 부양 여력이 소진, 세계경제 둔화와 이로 인한 우리 수출 감소 예상

## ▶ 환율 분쟁 지속

- 주요 선진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동아시아국가들은 경상수지 흑자 구조가 고착되면서 글로벌 불균형 조정을 위한 선진국과 중국간의 환율 분쟁이 세계 경제의 뇌관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폭은 2009년 GDP의 2.9%에 달하는 반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GDP대비 5.8%로 크게 대조
- 이에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 현상 장기화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환율 정책에 기인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위안화 등의 절상을 요구
-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환율 전쟁이 지속되면서 환율 분쟁은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로 잔존

## ▶ 경제정책 국제공조 이완

-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의 차이로 내년에는 각국의 경제 여건 차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에 따른 국제경제 변수들의 변동폭 확대 예견
  - 2008년 금융위기 해결책으로 확장적 거시 경제정책 국제공조가 순조로웠으나, 현재는 경기 회복 수준이 국가별로 차이를 노정함에 따라 거시경제정책 국제 공조과정에서 국가간 갈등 예상
  - 국가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거나 금융시장에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
- 자국경제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환율 분쟁은 세계교역량을

위축시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는 세계 경제를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뜨릴 위험 요인으로 부상

- 우리 경제에는 환율 및 통상 전쟁으로 수출 감소, 원화 가치 상승으로 채산성 악화, 환차손 발생, 수출 경쟁력 약화 등이 예상되며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국의 수출 감소는 대중 중간재 및 부품 수출 위축 초래

#### ▶ 금융 부실화

- 성장률을 크게 초과하는 대출 증가, 특히 PF 대출 관련 부채압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설업 부문의 부실화가 우려되며 금융권 외형확대도 리스크 요인으로 나타나는 등 다른 불안요인도 잠재
-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향후 시중금리가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저소득·저자산 가계 중심으로 부채상환 능력이 약화되면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 상존
  - 2009년 말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52.7%로 OECD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며 금융위기가 발생한 미국 (128.2%)을 이미 초과

#### ▶ 남북관계 긴장 고조

- 2010.03 천안함 폭침 사태 발생, 11.22 연평도 포격사태 발생으로 남북간 긴장이 극도로 고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증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

- 현재까지는 남북간 긴장 고조가 거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나 심리적 영향이 커 확대시 바로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에 충격이 증폭될 가능성이 농후

### 3.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 ▶ 재정·통화정책 정상화

- 불확실한 세계경제 변화에 한국경제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금융적 여력을 향후 확보하기 위해 2008 금융위기 이후 실시했던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정상화
- 글로벌 경제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 및 적극적 세입기반 확대 등을 통한 2010-2014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정부가 설정한 재정 건전성 회복 목표치 달성에 주력
  - 급증하는 복지지출 억제를 위해 근로 복지형으로 복지제공방식을 전환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위해 대형공공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제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강화
  - 세입 측면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세원의 투명성 제고 및 과표 양성화를 지속 추진
  - 재량적 지출에 대한 지출 상한제, 의무적 지출에 대한 세출·세입 연계 적자 중립화 장치를 도입하고 균형재정 달성까지 세출 증가율을 세입 증가율이나 성장률보다 낮게 억제하는 재정총량 목표치 설정

- 현재 우리나라 금리 수준은 우리경제 여건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인바 정책금리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금리를 정상화
  - 금리를 향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장기 저금리 기조 및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발생한 자산가격 거품 및 물가상승 압력 등 부작용 최소화

#### ▶ 물가 안정 대책

- 성장 목표가 높게 책정될수록 물가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고려, 잠재 성장률을 초과하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억제하고 물가안정을 우선하는 성장 정책을 운용
- 통화정책은 유동성과 금리의 실물경제 파급효과가 약해질수록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짐에 대비하여 금융위기를 극복과정에서 생산 및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 경로를 재점검하여 물가안정을 추구
- 최근 물가 상승세는 농산물 공급 부족과 총수요 압력의 변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기인하고 있으므로 내수 진작을 통해 물가 상승 속 경기침체(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예방

#### ▶ 서민·취약계층 고용지원책 강화

- 학교교육, 전직교육, 재교육 등을 통한 취업 통로를 계층별로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벗어나고 패자 부활의 직업 기회를 보장하는데 목표를 설정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을 개선하는데 주력

- 제조업을 비롯한 전통적인 산업부문에서의 고용은 수출 둔화가 예상되어 고용 창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 산업 등 고용을 동반하는 신성장동력에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
- 창업 장려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각종 보조금들은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효율성과 고용 유발효과 간의 균형을 토대로 지출과 투자 비중을 조정
- 2011년 시작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는 정년연장, 재취업, 연금지급 연령조절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전망이므로 고용 연장과 재취업 교육 등 퇴직자 관리 및 고용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강화
- 임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학습과 고용이 연계되는 방향을 강구하고 자영업자는 전직에 필요한 사전 교육을 강화
- 여성 취업자 증대를 위해서는 취업 안정성 확보에 최대의 정책 중점을 두고 재교육을 통한 準자격증 부여를 통해 장기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분야별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맞춤형 지식과 기술을 위한 실용적인 직업교육을 직업세계와 병행하여 이루어지도록 교육 제도를 강화

#### ▶ 외환·금융시장 안정화

- 우리나라 주택담보 대출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방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거시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가계 및 금융기관의

충격을 완화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금융시장 구조 개선 시급

-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대출·고정 금리 비중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DTI 규제를 일관성 있게 유지

-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완화를 위해 불필요한 외환대출 규제 등 외환 유출입 대책을 마련하고 자본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외환정책을 시장원리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자유화
- 원/달러 환율이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한 추세와 괴리되지 않도록 미세조정하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 금리인상에 따른 외국자본 유입 등에 따라 예상되는 원화 절상압력과 변동폭 확대를 최소화할 방안 강구
- 차기 G20 정상회의에서 경상수지 불균형 축소에 관한 서울회의의 합의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방안이 도출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 ▶ 수출증진대책 강화

- 미·중 환율마찰로 각국 정부는 사실상 보호무역주의를 은밀히 강화하고 있는 바,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대비 강화
- 수출 지역의 다변화, 부품·소재 수출품의 첨단화, 수출 품질 개선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형 수출구조로의 전환에 주력

- 주력수출품인 IT제품의 핵심 부품·소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저부가가치형 무역구조이므로 고부가가치형 무역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 가격경쟁력 제고를 세금 지원 등 국제적 경쟁력이 미진한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싱가포르, 대만 등의 성공적인 맞춤형 무역전략을 벤치마킹하여 해외마케팅 지원
- 중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하여 차세대 對中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환경산업, 문화컨텐츠, 유통물류, 자원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업영역을 확대
- 일본내 부품소재 전시회와 연계한 전시효과 제고, 전담 부스 설치를 통해 일본 부품소재 기업 투자유치 확대 및 기술이전 지원 등 부품소재 대일적자 개선을 위한 전략사업을 개발
- 홍보와 교육,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원,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등 FTA 체결로 접근성 높아진 시장 공략에 주력

#### ▶ 내수 활성화

- 글로벌 불균형 조정에 따라 선진국의 수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바, 수출중심적 성장구조에서 내수부문 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경제구조로 전환
- 이를 위해 단순히 수출수요를 대체하는 국내 수요의 진작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과 내수간의 차별 제거 등 내수관련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을 추진

- 또한 수출과 내수간 순순환적 관계의 복원을 위해 부품 소재 및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 부품업체들과 대기업 완성품 업체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보에도 관심을 집중

#### ▶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

- 한미 공조체제 강화, 외환보유고는 유사시 경제면에서의 국방력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외환보유고 확충,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출입 사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국가신인도 변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



**국가안보전략연구소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 467-23, 인스토피아 B/D

Tel. 02-572-7090 / Fax. 02-572-3303

---

■ 발 행 인 / 남성욱

■ 편집위원 / 이인호, 송은희, 김일기, 고명덕

■ 발 행 일 / 2010년 12월 21일

■ 인 쇄 / (주)늘품플러스 ☎ 070-7090-1177

---